

해외농업시리즈 9: 중국농업 3

중국의 식품안전 관리체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중국농업 시리즈는 한·중 FTA 협상이 개시된 상황에서 중국 농업에 대한 이해 증진을 목적으로 그동안 연구원이 발행한 중국농업 관련 보고서의 내용을 주제별로 요약 정리한 것입니다. 중국 정부의 농업·농촌 정책 관련 주요 문건 및 자료도 선별하여 수록하였습니다.

2012년 중국농업시리즈는 중국의 농산물 수급과 교역 동향, 농산물 무역 정책과 제도, 농업구조(생산·경영·유통구조), 농식품 안전관리체계, 주요 농업·농촌정책과 관련된 주제를 중심으로 발간할 예정입니다.

이 자료는 우리 연구원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내용 문의: 전형진 연구위원 02-3299-4324 hjchon@krei.re.kr

목 차

1. 식품안전 관리제도의 변화	1
1.1. 개요	1
1.2. 주요 변화 내용	2
1.3. 제도 변화의 특징	8
2. 식품안전 관리체계 구축 실태	15
2.1. 관련 법령	15
2.2. 관련 행정조직	16
2.3. 주요 제도·정책	18
3. 비교 및 시사점	32
부록 1. 농산물품질안전법	35
부록 2. 식품안전법	47
부록 3.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발행 중국농업 관련 연구보고서 목록	80

표 목 차

표 1. 중국 「식품안전법」의 주요 내용	4
표 2. 중국 국무원 식품안전위원회 구성	8
표 3. 무공해농산물, 녹색식품, 유기식품의 개념 비교	20
표 4. 중국의 친환경농식품 인증제도 비교	23
표 5. 중국의 GAP 도입 과정	25
표 6. 중국의 GAP 운영 현황	26
표 7. 중국의 HACCP 도입 과정	27

그림 목 차

그림 1. 중국의 식품안전관련 법령체계	15
그림 2. 중국의 식품안전 행정체계	17
그림 3. 중국의 농식품 품질안전관리제도 체계	18

1. 식품안전 관리제도의 변화

1.1. 개요

- 2000년대 들어 발생한 일련의 식품안전사고는 중국 소비자들의 경각심을 고취하는 계기가 되었음.
 - 중국 정부도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식품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식품안전 관리감독 책임을 명확히 하는 한편, 사고 발생 때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식품안전관리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각인하는 계기가 되었음.
- 특히 중국 정부는 2001년 WTO 가입 이후 농식품의 수출확대를 모색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 유럽, 미국 등 주요 중국산 농식품 수입국에서 중국산 수입농식품에서 잔류농약이 검출되는 등 사회문제가 야기되면서 국가신인도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는 판단하에 식품안전 관련 법률이나 기준, 인증제도 등을 강화하는데 주력하였음.
- 중국 정부는 기발생된 식품안전사고에 대해 사고발생 원인을 조사하여 이를 제거하는 조치를 개별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1995년 제정된 「식품위생법」에 근간을 두고 있는 식품안전관리체계를 근본적으로 개편하기 위한 논의를 전개하였음.
 - 결국, 2009년 「식품위생법」을 대체하는 「식품안전법」을 제정하고 새로운 식품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는데 이르렀음.

1.2. 주요 변화 내용

□ 「농산물품질안전법」 제정

- 중국은 식품과는 구별되는 식용농산물(재배업, 사육업 및 양식업 생산물)의 품질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에서 2006년 「농산물품질안전법」(주석령 제49호, 2006.11.1 시행)을 제정하였음.
 - 법률은 농산물 품질안전표준(2장), 농산물 산지(3장), 농산물 생산(4장), 농산물 포장과 표시(5장), 감독·검사(6장), 법률책임(7장) 등 총 8장 56조로 구성됨.
- 「농산물품질안전법」은 다음과 같은 7가지 기본제도를 확립하여 식용농산물의 품질안전 보장을 도모하고 있음.
 - 정부가 종합적으로 지도하고 농업주관부서가 관리감독하며, 기타 관련 부서는 역할을 분담하여 책임지는 식용농산물 품질안전관리체계 확립
 - 농산물 품질안전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농산물의 판매를 금지하는 농산물 안전기준 강제시행제도 확립
 - 농산물 산지의 오염으로 인한 농산물 품질저하를 방지하기 위한 농산물 산지 관리제도 확립
 - 농산물의 포장 및 표지 관리제도 확립
 - 농산물 품질안전 감독검사제도 확립
 - 농산물 품질안전 위험분석 및 평가제도, 정보공개제도 확립
 - 농산물 품질안전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추궁제도 확립

□ 「식품안전법」 제정

- 최근 중국 식품안전 관련 제도 변화의 핵심은 1995년 제정된 「식품위생법」을 대체하여 2009년 「식품안전법」을 제정하고 이를 토대로 더욱 엄격하고 규범화된 식품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한 것임.
- WTO 가입 이후 국내는 물론 국외에서까지 중국산 식품의 안전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중국 내부적으로 「식품위생법」을 기본법으로 하는 식품안전관련 법률·법규의 한계와 문제점이 두드러졌음.
- 중국 정부는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을 제도적 결함에서 찾고 2004년 7월부터 「식품위생법」 개정에 착수하여 2009년 2월 「식품안전법」을 제정 공포하고 2009년 6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음.
- 「식품안전법」은 우리나라의 보건복지부에 해당하는 위생부(衛生部)를 식품안전관련 업무의 종합 및 조정 책임 부처로 명시하였음.
 - 법률은 식품안전 위험모니터링 및 평가(2장), 식품안전 표준(3장), 식품 생산·경영(4장), 식품 검사(5장), 식품 수출입(6장), 식품 안전사고 처리(7장), 관리감독(8장), 법률책임(9장)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 국무원은 2009년 7월에는 「식품안전법」의 시행규칙에 해당하는 [식품안전법실시조례](국무원령 제557호)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음.
 - 조례는 식품안전 위험모니터링과 평가(2장), 식품안전 표준(3장), 식품 생산·경영(4장), 식품 검사(5장), 식품 수출입(6장), 식품 안전사고 처리(7장), 관리감독(8장), 법률책임(9장) 등 총 10장 64조로 구성됨.

표 1. 중국 「식품안전법」의 주요 내용

제1장 총칙(제1조 ~ 제10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무원에 식품안전위원회를 설립하고, 그 업무책임은 국무원이 정함(4조) ■ 중앙정부의 위생부(衛生部)는 식품안전관련 업무의 종합·조정을 담당하며, 식품안전 위험평가, 식품안전 표준제정, 식품안전 정보공개, 식품검사기관의 자격인증 조건 및 검사규범의 제정, 중대 식품안전사고 처리를 책임짐(4조) ■ 국가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國家質量監督檢驗檢疫總局)은 식품 생산단계,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國家工商行政管理總局)은 식품 유통단계, 국가식품약품관리감독국(國家食品藥品監督管理局)은 음식서비스활동(요식업, 식당 등)에 대한 관리감독을 실시함(4조) ■ 현(縣)급 이상 지방정부는 본법과 국무원 규정에 의거하여, 해당 행정구역의 위생행정, 농업행정, 품질감독, 공상행정관리, 식품약품관리감독 정부기관의 식품안전 관리감독 업무책임을 확정함(6조)
제2장 식품안전 위험모니터링 및 평가(제11조 ~ 제17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안전 위험모니터링제도를 실시하여, 식원성 질병, 식품오염 및 식품중 유해요소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함(11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정부의 위생부가 관련부처와 공동으로 '국가식품안전위험모니터링계획'을 제정하고, 성·자치구·직할시의 위생행정 부처는 '국가식품안전위험모니터링계획'에 의거하여 해당 행정구역의 상황을 고려하여 식품안전 위험모니터링 방안을 제정·실시함. ■ 식품안전 위험평가 제도를 실시하여, 식품과 식품첨가제의 생물적, 화학적, 물리적 위해에 대해 위험평가를 진행함(13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생부가 식품안전 위험평가 업무를 책임지며, 의학, 농업, 식품, 영양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식품안전 위험평가 전문가위원회를 조직하여 진행함. ■ 식품안전 위험평가 결과 해당 식품의 불안정성이 확인되면 국가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국가식품약품관리감독국은 각각 업무책임에 근거하여 상응하는 대책을 취하고, 해당 식품의 생산·경영을 중지시키는 한편 소비자에게 정보를 공개하여 섭취를 중단시켜야 함. 해당 식품의 국가표준 제정 또는 수정이 필요한 경우, 위생부는 이를 즉시 시행함(16조)
제3장 식품안전표준(제18조 ~ 제26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안전표준은 강제성 집행 표준임(19조) ■ 식품안전 국가표준은 위생부가 제정 및 공포의 책임을 지며, 표준화관리위원회(국가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 소속기관)가 국가표준 일련번호를 부여함(제21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 중 농약, 수의약의 잔류한계량 규정 및 검사방법은 위생부와 농업부가 제정하며, 가축·가금 도살에 관한 검사규정은 관련 주무부처가 위생부와 공동으로 제정함. ■ 위생부는 식용농산물 품질안전표준, 식품위생표준, 식품품질표준 및 관련 식품의 업계표준을 정비하여 통일적인 식품안전 국가표준을 공포함(제22조) ■ 식품안전 국가표준은 의학, 농업, 식품, 영양 분야의 전문가 및 국무원 관련 부처의 대표로 구성된 식품안전 국가표준 심의·평가 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해야 함(제23조) ■ 식품안전 국가표준이 없는 경우, 성(省)·자치구·직할시의 위생행정 부처가 국가표준을 참고하여 식품안전 지방표준을 제정할 수 있으며 위생부에 등록해야 함(제24조) ■ 기업이 생산한 식품에 대한 식품안전 국가표준 또는 지방표준이 없는 경우, 기업표준을 제정하고 성(省)·자치구·직할시의 위생행정 부처에 등록해야 함(제25조)

제4장 식품 생산·경영(제27조 ~ 제56조)

- 생산, 가공, 유통, 소비를 금지하는 식품의 범위 명시(제28조)
- 식품생산(가공 포함), 식품유통, 음식서비스업에 종사하는 경우 각각 식품생산허가, 식품유통허가, 음식서비스허가를 취득해야 함(제29조)
- 식품 생산·경영기업은 식품안전관리제도를 마련하고, 직원들을 대상으로 식품안전 교육훈련을 강화하며, 전담 또는 겸직 식품안전 관리인원을 배치해야 함(제32조)
- 국가는 식품 생산·경영기업이 GMP(Good Manufacturing Practice) 요구조건을 충족하도록 장려하고, HACCP체계를 구축하여 식품안전 관리수준을 제고함. GAP 및 HACCP체계 인증 기업에 대해 인증기관은 추적조사를 실시하고, 인증조건에 더는 들어맞지 않는 기업은 인증을 취소하고 즉시 국가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국가식품약품관리감독국에 통보하고 사실을 공개해야 함(제33조)
- 식용 농산물 생산기업 및 농민협동조직은 생산기록제도를 실시해야 함(제35조)
- 식품 생산기업은 식품 원료, 식품첨가제, 식품관련 제품의 입고검사 기록제도 및 식품 출고검사 기록제도를 실시하고 최소 2년 이상 보관해야 함(제36조, 제37조)
- 식품 경영기업은 식품 입고검사 기록제도를 실시하고, 최소 2년 이상 보관해야 함(제39조)
- 포장식품의 포장에 반드시 상표를 부착해야 하며 총 9가지 내용을 반드시 기재(제42조)
- 국가는 식품첨가제 생산허가제 실시하고, 허가 신청 조건과 절차는 공업제품 생산허가증 관리규정에 따름(제43조)
- 새로운 식품원료 사용을 신청한 식품생산 종사자나 식품첨가제 신제품 및 식품관련 신제품 생산활동 종사자는 위생부에 관련 제품의 안전성 평가자료를 제출해야 함(제44조)
- 국가는 식품리콜제도를 실시하여, 식품 생산·경영자가 생산(경영)하는 식품이 식품안전표준에 부합되지 않은 경우 즉시 생산(경영)을 중단하고 이미 시장에 판매된 식품을 회수토록 하며 관련 생산·경영자와 소비자에게 통지하고 기록해야 함(제53조)
 - 식품 생산자는 회수된 식품에 대해 보완, 무해화처리, 폐기 등 조치를 취하고, 식품 회수 및 처리 상황을 현(縣)급 이상 품질감독 행정부처에 보고해야 함.
 - 식품 생산·경영자가 식품안전표준에 부합하지 않는 식품을 회수하지 않거나 경영을 중단하지 않는 경우, 현(縣)급 이상 품질감독, 공상행정관리, 식품약품감독관리 행정부처는 회수 또는 경영 중단을 명령할 수 있음.
- 식품 광고의 내용은 질병예방, 치료효과를 포함할 수 없으며(제54조), 사회단체 또는 기타 조직, 개인이 허위광고를 통해 소비자에게 식품을 홍보하여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손상했을 경우, 식품 생산·경영자와 연대 책임을 지도록 함(제55조)

제5장 식품검사(제57조 ~ 제61조)

- 식품검사기관의 자격 인증조건과 검사 규범은 위생부가 규정하고(제57조), 식품검사는 식품검사기관이 지정한 검사인인 단독으로 진행함(제58조)
- 식품검사는 식품검사기관 및 검사인 책임제를 실시하여, 식품검사 보고에는 식품검사 기관과 검사인이 서명, 날인토록 하고 식품검사 보고에 대해 책임지도록 함(제59조)
- 식품안전 관리감독 행정부처는 식품검사 면제를 시행할 수 없음(제60조)
 - 현(縣)급 이상의 품질감독, 공상행정관리, 식품약품감독관리 행정부처는 정기 또는 부정기적으로 식품 샘플을 구매하여 검사를 실시하여야 함.
 - 식품검사는 본 법률의 규정에 부합하는 식품검사기관에 위탁하고 관련 비용을 지불하며, 검사 결과에 이견이 있을 경우 재검사를 진행할 수 있음.

제6장 식품수출입(제62조 ~ 제69조)

- 중국으로 수출되는 식품의 수출상 또는 대리상은 국가출입국검사검역 행정부처(국가품질감독 검사검역총국 및 지방 출입국검사검역국)에 신고해야 함(제65조)
 - 중국으로 수출되는 식품의 국외 식품생산기업은 국가출입국검사검역 행정부처에 등록해야 하며, 등록된 기업 명단은 정기적으로 공포해야 함.
- 수입된 포장식품에는 원산지 및 중국 내 대리상의 명칭, 주소, 연락 방법 등이 포함된 중문 상표와 설명서가 있어야 하며, 없는 경우 수입을 금지함(제66조)
- 수입상은 식품 수입·판매 기록제도를 실시하고, 최소 2년 이상 보존토록 함(제67조)
- 국가출입국검사검역 행정부처는 수출입 식품의 수입상, 수출상, 수출식품 생산기업의 신용 기록제도를 실시하고, 이를 공포해야 함(제69조)

제7장 식품안전사고 처리(제70조 ~ 제75조)

- 국무원이 '국가식품안전사고응급예비안(國家食品安全事故應急預案)' 제정함(제70조)
 - 현(縣)급 이상 지방정부는 관련 법률·법규 규정과 상급 정부의 식품안전사고응급예비안 및 해당 행정구역의 상황에 의거하여 해당 행정구역의 식품안전사고응급예비안을 제정하고 상급 정부에 보고해야 함.
- 중대 식품안전사고 발생 시, 보고를 받은 현(縣)급 위생행정 부처는 해당 정부와 상급 정부의 위생행정 부처에 보고하고, 이들은 다시 상부에 보고해야 함(제71조)
- 현(縣)급 이상 지방정부의 위생행정 부처는 식품안전사고 보고 접수 후, 즉시 해당 행정구역 농업행정, 품질감독, 공상행정관리, 식품안전감독관리 행정부처와 함께 조사 및 처리를 진행함(제72조)
 - 중대 식품안전사고 발생 시, 현(縣)급 이상 지방정부는 즉시 식품안전사고처리 지휘 기구를 조직하여 응급예비안을 가동하고 전관 규정에 따라 처리함.
- 중대 식품안전사고가 2개 이상의 성(省)·자치구·직할시와 관련된 경우, 위생부가 규정에 의거하여 사고 책임 조사를 조직함(제73조)
- 식품안전사고 조사는, 사고 업체의 책임 규명 이외에 관리감독과 인증 책임이 있는 관리감독 행정부처 및 인증기관 직원의 책임 여부도 조사해야 함(제75조)

제8장 관리감독(제76조 ~ 제83조)

- 현(縣)급 이상 지방정부는 해당 행정구역의 위생행정, 농업행정, 품질감독, 공상행정 관리, 식품약품감독관리 행정부처를 조직하여 해당 행정구역의 연간 식품안전관리감독계획을 제정하고, 계획에 따라 업무를 실시함(제76조)
- 현(縣)급 이상의 품질감독, 공상행정 관리, 식품약품감독관리 행정부처
 - 식품안전관리감독 업무 수행 시 권한 명시(제77조)
 - 식품 생산·경영자에 대한 감독·조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기록해야 하며, 감독·조사자와 품 생산·경영자의 서명 후 문서로 보관함(제78조)
 - 식품 생산·경영자에 대한 식품안전신용문서를 작성하여, 허가발급, 평시 감독·조사 결과, 위법행위 처벌 등 관련 사항을 기록함. 불량 신용정보가 있는 식품 생산·경영자에 대해 감독·조사 횟수를 늘림(제79조)
 - 자문, 소송, 신고를 받았을 경우, 업무에 해당하는 사안인 경우 이를 접수하고, 즉시 답변, 사실 확인, 처리를 해야 함. 해당 사안이 아닌 경우 서면으로 이를 통지하고, 처리권한을 가진 행정부처에 이를 전달해야 함(제80조)

- 법정 권한과 절차에 따라 식품안전관리감독 업무책임을 이행하고, 식품 생산·경영자의 동일한 위법행위에 대해 2회 이상의 행정처분을 하지 않으며, 범죄에 해당되는 경우 공안기관에 이송해야 함(제81조)
- 국가는 식품안전정보 일괄공표제도를 수립하여 위생부가 다음 사항을 공표함(제82조)
 - 국가 식품안전 전체 상황, 식품안전 위험평가정보 및 식품안전 위험경보정보
 - 중대 식품안전사고 및 관련 처리 정보, 기타 중요 식품안전정보 및 국무원이 일괄 공표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정보

제9장 법률책임(제84조 ~ 제98조)

- 본 법률 규정 위반사항에 대한 법률 책임(벌금형, 생산 및 영업 중지, 허가증 취소 등) 명시(제84조~제91조)
 - 벌금형: 제품가치가 1만 위안 이하인 경우, 2천 위안~5만 위안 이하. 제품가치가 1만 위안 이상인 경우, 제품가치의 5배 이상 10배 이하
- 식품 생산, 유통 또는 음식서비스 허가증이 취소된 업체의 경우, 직접적인 책임자는 5년 이내에 식품 생산·경영 업무에 종사할 수 없음(제92조)
- 본 법률 규정을 위반하고 형사처벌 혹은 해직처분을 받은 식품검사기관 인원은 형 완료 또는 처분 결정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식품검사 업무에 종사할 수 없음(제93조)
- 본 법률 규정을 위반하고, 현(縣)급 이상 지방정부가 식품안전관리감독 과정에서 업무 미이행으로 해당 행정구역에서 중대 식품안전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관련 책임자는 강등, 직위 해제 또는 해직 처분함(제95조)
- 본 법률 규정을 위반하고 인체, 재산상의 손해 또는 기타 손해를 입힌 경우, 법률에 의거 배상 책임을 짐.
 - 식품안전표준에 부합되지 않는 식품을 생산하거나 식품안전표준에 부합되지 않는 식품임을 알고도 판매한 경우 소비자는 손해배상 청구 이외에 생산자 또는 판매자에게 지급가격의 10배에 해당하는 배상금을 요구할 수 있음(제96조)

□ 국무원 식품안전위원회 설립

- 국무원은 2010년 2월 10일 「식품안전법」 제4조에서 설립을 규정한 국무원 식품안전위원회의 설립에 관한 문건 《국무원식품안전위원회 설립에 관한 통지關於設立國務院食品安全委員會的通知》(國發[2010]6호)를 하달하고 이에 근거하여 식품안전위원회를 설치하였음.
- 《통지》는 국무원 식품안전위원회가 식품안전 업무와 관련한 최고 의사결정기구라고 명시하고, 일상 업무 수행을 위한 식품안전위원회 판공실(辦

公室)의 설치를 규정하였음.

- 또한 식품안전위원회의 주요 업무를 식품안전 현황 및 추이 분석, 식품 안전업무의 배분 및 통합지도, 식품안전 관리감독에 관한 중요 정책 제시, 식품안전 관리감독 책임이라고 명시하였음.

표 2. 중국 국무원 식품안전위원회 구성(2012년 6월 현재)

구 분	명 단
주임(1명)	국무원 리커창(李克強) 부총리
부주임(2명)	국무원 후이량위(回良玉) 부총리, 국무원 왕치산(王岐山) 부총리
위원(15명)	국무원 롱취엔(尤權) 부비서장, 과학기술부 장라이우(張來武) 부부장,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리우티에난(劉鐵男) 부주임, 공업정보화부 리이중(李毅中) 부장,公安부 황밍(黃明) 부부장, 재정부 왕진(王軍) 부부장, 환경보호부 리간지에(李幹傑) 부부장, 농업부 한창푸(韓長賦) 부장, 상무부 지양정웨이(董增偉) 부부장, 위생부 천쥬(陳竺) 부장,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저우바이화(周伯華) 국장, 국가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 왕용(王勇) 국장, 국가식량국 니에젠방(聶振邦) 국장, 국가식품약품관리감독국 인리(尹力) 국장, 국무원 식품안전위원회 판공실 장용(張勇) 주임

1.3. 제도 변화의 특징

□ 식품안전관리체계의 명확화

- 「식품안전법」에 근거한 중국의 식품안전관리체계는 전 방위적 관리감독 원칙을 제시하였음.
 - 식품생산(가공 포함), 식품유통, 음식서비스 3단계로 구분되었던 식품 안전관리 단계에 식용농산물 생산(농산물 재배, 축산물 사육, 수산물 양

식) 단계도 포함시켜 이른바 “밭에서 식탁까지”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였음.

- 또한 식품 이외에 식품첨가제, 식품관련 제품(식품에 사용하는 포장재료, 용기, 세척제, 소독제) 및 식품생산에 사용되는 기구, 설비도 관리 대상에 포함하였음.

○ 중국의 새로운 식품안전관리체계는 다원화체계와 일원화체계의 상호 결합 원칙을 수립하였음.

- 먼저 식용생산물 생산단계, 식품생산단계, 식품유통단계, 음식서비스 활동단계의 안전관리 업무는 각각 농업부¹⁾, 국가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국가식품약품관리감독국이 담당함으로써 단계별 다원화관리체계를 구축하였음.
- 그러나 위생부가 식품안전관리 업무의 종합 및 조정 기능을 수행하고, 식품안전 관련 최상위 심의기구로 국무원 식품안전위원회를 설치함으로써 식품안전 행정체계의 통합을 모색하였음.

○ 중국의 새로운 식품안전관리체계는 지방정부의 관리감독 책임 강화 원칙을 수립하였음.

- 현(縣)급 이상 지방정부가 해당 행정구역의 식품안전 관리감독 업무를 통일적으로 책임지고, 지도, 조직, 조정을 실시하도록 하였음.

1) 농업부는 「농산물품질안전법」에 의거하여 식용농산물 생산을 관리감독하지만, 식용농산물의 품질안전표준 제정, 식용농산물의 안전관련 정보공개는 「식품안전법」의 규정에 근거함(「식품안전법」 제2조).

- 국가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국가식품약품관리 감독국의 수직 관리를 받는 현(縣)급 이상 지방정부의 해당 행정부처도 해당지역 지방정부의 통일적인 조직 및 조정에 복종하도록 하였음.

□ 식품 생산·경영자의 사회적 책임 강화

- 「식품안전법」은 식품생산(가공포함), 식품유통, 음식서비스업에 종사하는 경우 각각 식품생산허가, 식품유통허가, 음식서비스 허가를 받도록 규정함으로써 식품생산, 유통, 음식서비스 허가제를 확립하였음(제29조).
- 「식품안전법」은 또한 식용 농산물 생산기업 및 농민협동조직이 생산기록 제도를 실시하도록 규정하였음(제35조).
 - 식품 생산기업은 식품 원료, 식품첨가제, 식품관련 제품의 입고검사 기록제도 및 식품 출고검사 기록제도를 실시하고 최소 2년 이상 보관하도록 하였음(제36조, 제37조).
 - 식품 경영기업은 식품 입고검사 기록제도를 실시하고, 최소 2년 이상 보관하도록 규정하였음(제39조).
- 「식품안전법」은 기업 내부의 식품안전관리제도를 수립하여 식품 생산·경영기업이 기업 자체적으로 식품안전관리제도를 수립하고, 직원들을 대상으로 식품안전 교육훈련을 강화하고, 전담 또는 겸직 식품안전 관리인원을 배치하도록 규정하였음(제32조).
 -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불안전 식품의 리콜 및 영업정지제도의 도입도 명시하였음.

□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식품안전보장제도 도입

- 「식품안전법」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식품안전위험 모니터링제도와 식품안전위험 평가제도의 실시를 규정하였음.
- 먼저 식인성(食因性) 질병, 식품오염 및 식품 중 유해요소에 대한 모니터링 실시를 규정하였음(11조).
 - 위생부가 관련부처와 공동으로 ‘국가식품안전위험 모니터링계획’을 제정하고, 성(省)·자치구·직할시의 위생행정 부처는 이 계획에 의거하여 식품안전 위험 모니터링 방안을 제정하도록 하였음.
- 다음으로 식품과 식품첨가제의 생물적, 화학적, 물리적 위해요인에 대해서 위험평가를 진행하도록 하였음(13조).
 - 위생부가 식품안전 위험평가 업무를 책임지며, 의학, 농업, 식품, 영양방면의 전문가로 구성된 식품안전 위험평가 전문가위원회를 운영토록 하였음.
 - 위험평가 결과 해당 식품의 불안정성이 확인되면 생산·경영을 중지시키고 소비자에게 정보 공개. 해당 식품의 국가표준 제정·수정이 필요한 경우, 위생부는 즉시 시행토록 하였음(16조).

□ 식품안전 표준체계 정비

- 「식품안전법」은 식용농산물 품질안전표준, 식품위생표준, 식품품질표준, 식품관련 업계표준 가운데 강제집행 표준을 정비하여 식품안전 국가표준

으로 통일하였음.

- 식품안전 국가표준의 제정 및 공포 주체를 국가표준화관리위원회에서 식품안전업무 총괄부처인 위생부로 교체하고 식품안전국가표준심의 평가위원회를 신설하였음.
- 또한 식품안전표준을 국가표준, 지방표준, 기업표준 3가지로 통일하고 식품안전 업계표준을 폐지하였음.

□ 식품안전사고 긴급대응체계 확립

- 「식품안전법」은 국무원이 ‘국가식품안전사고응급예비안(國家食品安全事故應急預案)’을 제정하도록 함으로써(제70조) 식품안전사고 긴급대응 매뉴얼 제정을 규정하였음.
- 현(縣)급 이상 지방정부는 해당 행정구역의 ‘식품안전사고응급예비안’을 제정하고 상급 정부에 보고토록 하였음(제70조).
- 식품안전사고 보고제도를 확립하여 식품안전관리 행정부처의 일상적 관리감독 중 식품안전사고를 발견하거나 신고를 접수하면 위생행정 부처에 통보하고 상급 정부와 상급 정부의 위생행정 부처에 보고토록 하였음.
- 식품안전사고의 처리는 위생행정 부처가 식품안전사고 보고 접수 후, 즉시 해당 행정구역 농업행정, 품질감독, 공상행정관리, 식품안전감독 관리 행정부처와 함께 조사 및 처리토록 하였음(제72조).
- 식품안전사고 발생 시, 해당 행정구역 정부는 즉시 식품안전사고처리 지

취부를 조직하고 응급예비안을 가동하도록 하였음.

- 식품안전사고 조사는, 사고 업체의 책임 규명 이외에도 관리감독과 인증 책임이 있는 관리감독 행정부처 및 인증기관의 책임 여부도 동시에 조사하여 처리하도록 하였음(제75조).

□ 엄격한 법률책임제도 확립

- 「식품안전법」은 식품안전 관련 법률 규정을 위반한 행위를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관련 민사, 형사 및 행정적 책임 내용을 상세하게 규정하였음.
- 징벌성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여 식품안전표준에 부합하지 않는 식품을 생산하거나, 식품안전표준에 부합되지 않는 식품임을 알고도 판매한 경우 소비자는 손해배상 청구 이외에 생산자 또는 판매자에게 손해배상 판결액의 10배에 해당하는 배상금을 요구하도록 하였음(제96조).
- 민사배상우선 원칙을 수립하여 법률 규정을 위반한 경우 민사배상책임을 지고, 벌금을 납부해야하며 이를 동시에 지불할 능력이 없는 경우 민사배상책임을 우선적으로 지도록 하였음.

□ 「식품안전법」과 「농산물품질안전법」의 연계 강화

- 중국은 식품에 대한 법률적 정의상 식용농산물도 「식품안전법」의 관리대상 범위에 포함되지만 가공식품과 동일한 품질관리 방식을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농산물품질안전법」을 별도로 제정하여 농업부가 식용농

산물에 대한 행정관리 책임을 지도록 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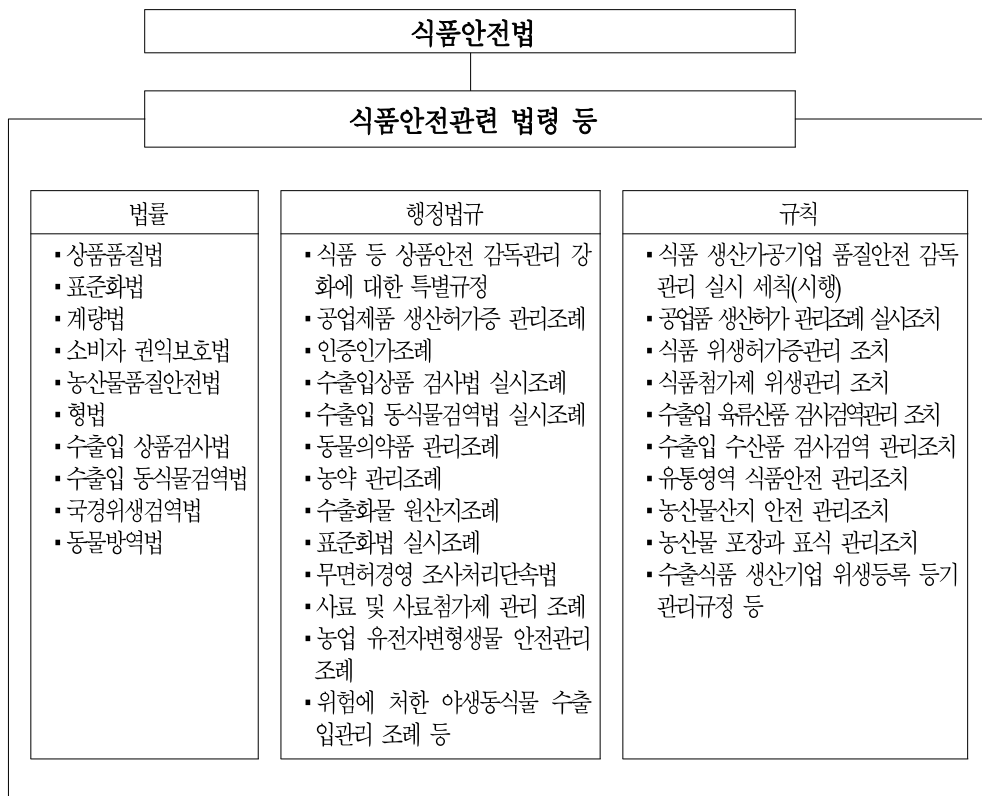
- 「농산물품질안전법」과 「식품안전법」의 법률간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식품안전법」 제2조는 식용농산물의 품질안전관리는 「농산물품질안전법」의 적용을 받고, 품질안전표준의 제정, 공포 및 정보 공개는 「식품안전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규정하였음.

2. 식품안전 관리체계 구축 실태

2.1. 관련 법령

- 중국의 식품안전법령체계는 상위법으로 「식품안전법」을 두고 하위법으로 신선농산물과 식품의 생산부터 유통, 소비까지의 식품위생 및 안전관리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법령을 구비하고 있음.

그림 1. 중국의 식품안전관련 법령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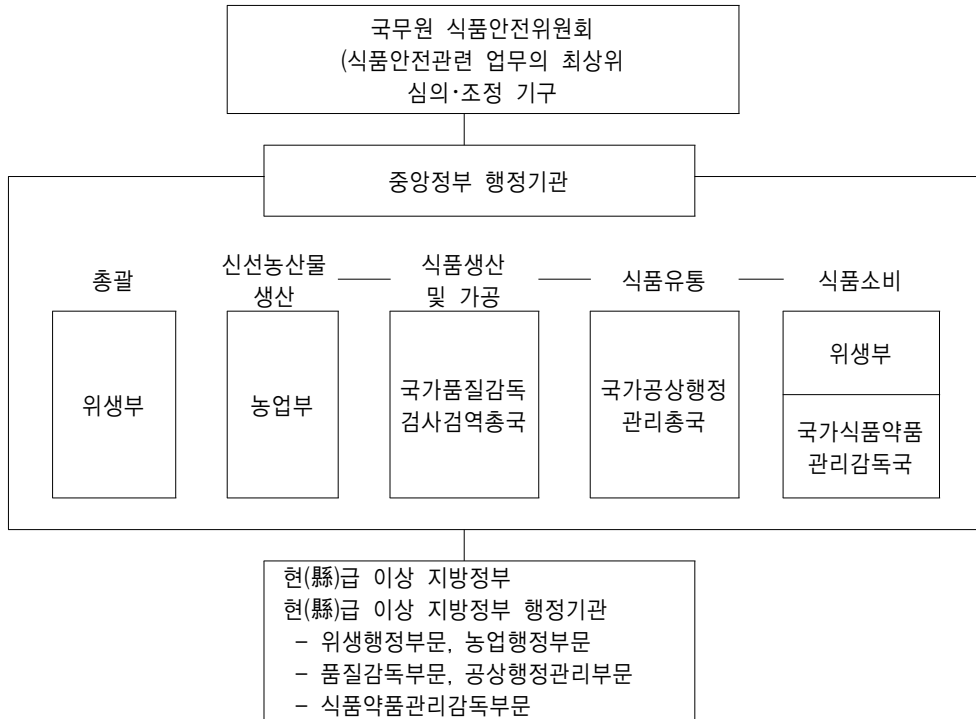


- 상위법인 「식품안전법」은 기본법의 역할을 수행하며 위생부를 식품안전 관련 업무의 종합 및 조정책임 부처로 명시하고 식품안전 위험모니터링 및 평가, 식품안전표준, 식품 생산·경영, 식품 검사, 식품 수출입, 식품 안전사고 처리, 관리감독, 법률책임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 주요 하위 법령은 신선농산물과 식품의 생산부터 유통, 소비까지의 식품위생 및 안전관리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법령을 포함함.

2.2. 관련 행정조직

- 중국의 식품안전 행정조직체계는 국무원 식품안전위원회, 중앙정부 행정기관, 현(縣)급 이상 지방정부 및 지방정부의 행정기관 3단계로 구성됨.
- 국무원 식품안전위원회는 식품안전 현황 및 추이를 분석하고, 식품안전업무를 배분하고 통합 지도하며, 식품안전 관리감독에 관한 중요 정책을 제시하고 관리감독을 책임지는 식품안전 업무관련 최고심의기구임.
- 중앙정부의 농업부, 국가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국가식품약품관리감독국은 각각 신선농산물(재배업, 사육업, 양식업)의 생산단계, 식품 생산 및 가공단계, 식품 유통단계, 식품 소비(요식업, 식당 등) 단계의 안전관리를 책임짐.
- 위생부는 식품안전관련 업무를 종합·조정하는 총괄기관으로서 위험평가, 표준제정, 정보공개, 식품검사기관 자격인증 조건·검사규범 제정, 중대 식품안전사고 처리 등을 담당함.

그림 2. 중국의 식품안전행정체계



- 현(縣)급 이상 지방정부는 관할 행정구역의 식품안전 관리감독 업무를 통일적으로 책임지고, 지도·조직, 조정 업무를 담당함.
 - 또한 「식품안전법」과 국무원 규정에 의거하여, 해당 행정구역의 위생 행정, 농업행정, 품질감독, 공상행정관리, 식품약품관리감독 행정기관의 식품안전관리감독 업무의 책임을 확정함.
- 중앙행정기관인 국가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국가 식품약품관리감독국 등의 수직적인 관리를 받는 현(縣)급 이상 지방정부의 해당 행정부처도 해당지역 지방정부의 통일된 조직 및 조정에 복종하도록 하였음.

2.3. 주요 제도·정책

□ 개요

- 중국은 식용농산물 생산단계와 식품생산·가공단계, 식품유통·판매단계, 식품소비단계에서 발생하는 위해요소를 제거하기 위해 “농장에서 식탁까지” 농산물안전성 확보 시스템 구축에 주력하고 있음.
- 생산단계에서 GAP 도입 및 친환경농식품 인증, 식품가공단계에서 HACCP 및 GMP 도입, 식품유통·판매단계에서 GHP 도입 및 ‘삼녹(三綠)프로젝트’ 추진, QS마크 부착, 식품소비단계에서 식품리콜제도 그리고 전체 단계에 걸쳐 이력추적제도를 도입하였음.

그림 3. 중국의 농식품 품질안전관리제도 체계



□ 친환경농식품 인증제도

- 중국은 무공해농산물(無公害農產品), 녹색식품(綠色食品), 유기식품(有機食品)에 대한 인증제도를 갖추고 있음. 이는 우리나라의 유기농산물과 무농약농산물을 포함하는 친환경농산물 개념에 상응하는 인증 농산물임.
 - 우리나라와 달리 중국의 무공해농산물, 녹색식품, 유기식품은 모두 신선농산물과 가공식품을 포함함.
- 중국은 우리나라의 친환경농산물이라는 용어와 같이 친환경농업을 경영하는 과정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통칭하면서 「친환경농업육성법」과 같이 법률에 따라 개념 정의된 용어는 없음.
- 중국은 무공해농산물, 녹색식품, 유기식품별로 구분하여 인증하는 다원화된 인증제도를 운영함. 먼저 무공해농산물은 시장진입을 위한 최소한의 식품안전성 조건을 갖춘 국내인증 농식품임.
 - 생산과정에서 산지환경, 화학합성 농약 및 비료의 사용 제한 등 준수해야 할 표준이 있고, 인증을 획득하고 생산품에 인증 표지를 부착한다는 점에서는 일반 농식품과 차이가 있으나 일반적 의미에서의 친환경농식품과는 거리가 먼 ‘중국적’ 기준의 친환경농식품임.
- 녹색식품은 국제표준을 참고하였지만 중국 국내표준이 국제표준에 우선하는 국내인증 농식품으로 역시 ‘중국적’ 기준의 친환경농식품임.
 - 화학합성 물질의 사용 방식에 따라 제한적 사용을 허용하는 A급과 일절 사용을 금지하는 AA급으로 구분됨.

- 유기식품과 같이 화학합성 물질의 사용을 금지한다는 점에서 AA급 녹색식품은 유기식품과 동일시됨.
 - 화학합성 농업투입재의 제한적 사용을 허용하는 A급 녹색식품은 유기합성농약의 사용을 금지하는 우리나라의 무농약농산물과는 일정한 차이가 있음. 2009년 4월 「친환경농업육성법」 개정 이후 개념이 폐기된 저농약농산물 개념과 유사함.
- 중국의 유기식품은 유기농산물과 유기가공품의 인증을 단일 법령체제 하에서 실시하고 있음. 유기식품 인증의 근거가 되는 중국의 유기식품 표준도 기본적으로 국제표준에 준하는 것으로 국제적인 동등성을 확보하고 있음.

표 3. 무공해농산물, 녹색식품, 유기식품의 개념 비교

구 분		개념 정의
유기식품	유기	“생산, 가공, 판매과정에서 국가표준에 부합하는 인류가 소비하고 동물이 식용할 수 있는 생산품”(국가표준 GB/T19630-2005)
	유기 전환	“국가표준에 따라 관리를 시작한 때로부터 유기인증을 획득하기 이전 기간인 전환기 (conversion)에 생산 및 가공된 생산품”(국가표준 GB/T 19630-2005)
녹색식품	AA급	“생산지역의 환경이 산지환경표준(NY/T 391)에 부합하고, 생산과정에서 화학 합성의 비료, 농약, 수의약, 사료첨가제, 식품첨가제 및 기타 환경과 신체건강에 유해한 물질을 일절 사용하지 않으며, 유기 생산방식에 따라 생산하고, 생산품의 품질이 녹색식품 생산품표준에 부합하며, 전문 인증기관의 인증을 거쳐 AA급 녹색식품 표지의 사용을 허가받은 생산품”(각종 녹색식품 표준)
	A급	“생산지역의 환경이 산지환경표준(NY/T 391)에 부합하고, 생산과정에서 녹색식품 농자재 사용 준칙과 생산조작 규정의 요구에 의거하여 엄격히 화학합성 농자재의 사용량을 제한하며, 생산품의 품질이 녹색식품 생산품표준에 부합하고, 전문 인증기관의 인증을 거쳐 A급 녹색식품 표지의 사용을 허가받은 생산품”(각종 녹색식품 표준)
무공해농산물		“산지환경, 생산과정, 농산물 품질이 무공해농산물 표준의 요구조건에 부합하며, 인증에 합격하여 인증서를 획득하고 무공해농산물 인증 표지의 사용을 허가받은 가공을 거치지 않았거나 단순 가공한 식용 농축수산물”([무공해농산물관리방법] 제2조)

주: [無公害農產品管理辦法]; GB/T19630-2005(有機產品); NY/T 391-2000(綠色食品產地環境技術條件)을 참고하여 정리

- 중국의 무공해농산물, 녹색식품, 유기식품 인증제도는 각각 도입 시기, 목적, 법령 및 표준체계, 인증 조직체계, 인증 절차 및 비용, 인증 표지 등에서 뚜렷하게 구별됨.
- 먼저 인증제도 도입 시기를 보면 녹색식품은 1993년부터 제도를 운용하기 시작하였음. 무공해농산물과 유기식품은 각각 2002년과 2005년에 제도가 확립되었음.
- 인증제도의 목적을 보면 무공해농산물은 농산물의 품질과 안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 주요 목적이며, 농업생산의 규범화, 기본적 식품안전 보장, 일반적 소비자의 수요 충족이 주요 정책 목표임.
 - 인증제도의 운용 측면에서 보면 ‘정부에 의한 운용, 공익성 인증’이라는 특징이 있음.
- 녹색식품과 유기식품의 인증제도는 고부가가치의 실현 및 브랜드화가 주요 목적이며, 농식품의 안전성과 생태환경 보호를 동시에 추구함.
 - 생산과정에서 식품안전 수준 제고, 고품질 농산물에 대한 수요 충족, 시장경쟁력 강화가 주요 정책 목표임.
 - 유기식품 인증제도는 생태환경 보호 및 유지가 주된 목적임. 유기식품 인증은 유기식품 생산경영체의 경영행위로서 실질적으로 시장메커니즘에 의해 제도가 운용되는 특징이 있음.
- 인증 관련 법령을 보면 무공해농산물과 유기식품은 행정법규인 [무공해농산물관리방법](2002.4.29 시행)과 [유기산물인증관리방법](2005.4.1시행)

에서 인증관련 제반 사항을 총괄함.

- 그러나 인증의 역사가 가장 오래된 녹색식품은 인증관련 제반사항을 총괄하는 법령이 따로 존재하지 않음.

○ 친환경농식품 인증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인증의 기술적 근거인 표준이 제시한 기준을 충족해야 함.

- 무공해농산물 표준은 농업부가 제정한 강제성 및 비강제성 농업업종표준으로 생산품의 품질, 산지환경 조건, 투입재 사용, 생산관리기술, 가공기술, 인증관리기술 등 6가지 분야의 표준으로 구성됨(2009년 말 현재 281개 표준).
- 녹색식품 표준은 농업부가 제정한 비강제성(추천성) 농업부문 표준으로서 산지환경, 생산기술, 생산품, 포장저장운송, 기타 등 5개 분야 표준으로 구성됨(2009년 말 현재 102개 표준).
- 유기식품 표준은 2005년 1월 제정된 비강제성 국가표준인 GB/T 19630-2005(유기산품)이 유일함. 생산, 가공, 표지 및 판매, 관리체계 등 모두 4개 부분으로 구성됨. 이 표준은 유기식품에 한정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유기산품(有機產品; organic products)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생산, 가공, 판매과정이 국가표준(GB/T 19630-2005)에 부합하는 인류가 소비하고 동물이 식용할 수 있는 생산품”으로 정의함.

○ 인증기관을 보면 무공해농산물, 녹색식품, 유기식품의 인증 주무기관이 서로 다른 다원화 체계를 갖추고 있음.

- 무공해농산물과 녹색식품만 농업부의 농산물품질안전중심(AQSC)과 중국녹색식품발전중심(CGFDC)이 주무기관임.

- 유기식품은 농업부와 무관한 국무원 중국국가인증인가감독관리위원회 (CNCA)가 주무기관임.

표 4. 중국의 친환경농식품 인증제도 비교

		무공해농산물	녹색식품	유기식품	
총괄 법령		무공해농산물관리방법 -2002.4.29 공포·시행	없음	유기산물인증관리방법 -2004.11.5 공포, 2005.4.1 시행	
표준 체계	성질	강제성 및 비강제성 농업업 종표준 혼용	비강제성 농업업종 표준	비강제성 국가표준	
	구조	6개 분야: 산지환경, 생산 품, 투입재사용, 생산관리기 술, 가공기술, 인증관리기술	5개 분야: 산지환경, 생 산기술, 생산품, 포장·저 장·운송, 기타	4개 분야: 생산, 가공, 표지 및 판매, 관리체계	
	제정 현황	2009년 현재 281개 표준	2009년 현재 102개 표준	단일국가표준(2005년) GB/T 19630-2005	
	수준	일반 농식품에 비해 일부 지표의 요구수준이 높음.	국제표준 참고, 일반농식품 과 구분(중국적 기준 적용).	국제표준 및 선진국 표준에 준함(동등성 확보)	
인증 조직 체계	인증 총괄	농업부 농산물품질안전중심 (AQSC)	농업부 중국녹색식품발 전중심(CGFDC)	국무원 중국국가인증인가감독관리위원회(CNCA)	
	인증 기관	농산물품질안전중심 • 산지인정은 지방정부 무 공해농산물관련 업무기구	중국녹색식품발전중심 • 산지인정은 지방정부 녹 색식품관련 업무기구	중국합격평정국가인가위원회 (CNAS)가 인가하고 CNCA가 비준한 국가 및 민간 전문 인 증기관: 25개 기관(2009년)	
	산지 환경검사	AQSC가 인가한 기관 • 191개 기관(2009년)	CGFDC가 인가한 기관 • 72개 기관(2009년)	상 동	
	생산품 품질검사	상 동 • 165개 기관(2009년)	상 동 • 46개 기관(2009년)	상 동	
	유효기관	3년	3년	1년	
	인증추진 방식	정부운용, 공익성 인증	정부추동, 시장운용	경영성 인증행위	
	인증 표지	 무공해농산물	 A급 녹색식품	 AA급 녹색식품	 유기전환산물

자료: 각종 문헌자료를 참고하여 필자 작성

- 중국에서 친환경농식품 인증제도의 확립은 중국 정부의 강력한 정책적 의지의 산물로서 정부가 친환경농식품산업의 발전을 견인하였음.
 - 중국에서 친환경농식품의 인증은 주로 농가와 연계된 규모화된 생산기지를 조성하고 생산, 가공, 유통을 통일적으로 관리하는 기업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는 점이 커다란 특징임.
 - 중국 친환경농식품산업의 발전은 내수시장 보다는 수출 시장, 인증 형식에서 개별 농장 인증이 아닌 다수의 농가가 연계된 생산기지 인증, 주요 의사결정자가 개별 농가가 아닌 기업(또는 합작사)이라는 특징이 있음.

□ 양호농업규범(良好農業規範, GAP)

- 중국은 WTO가입 이후 국내외적으로 식품안전사고가 빈발하여 국가신인도가 하락하고, 주요 중국산 농산물 수입국인 일본, 유럽에서 수입농산물의 안전성에 대한 요구수준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GAP를 도입하였음.
- China GAP 규범 및 국가표준 제정시 Global GAP로 인정되고 있는 Eurep GAP을 참고함으로써 사실상 세계적 수준의 GAP을 도입하였음.
 - 국가인증인가감독관리위원회(CNCA)는 Eurep GAP/Food PLUS와 2005년 5월과 2006년 6월에 각각 《중국국가인증인가감독관리위원회와 Eurep GAP/Food PLUS간 기술협력 양해각서》, 《China GAP 인증체계와 Eurep GAP 인증체계 기준성 비교문제 양해각서》를 체결함으로써 China GAP가 Global GAP와 제도적 동등성을 인정받고 있음
 - China GAP 1급 인증은 Eurep GAP 인증과 동등성을 인정받아 중국 농산물의 수출확대에 기여하고 있음.

표 5. 중국의 GAP 도입 과정

시기	추진 내용
2002.3.18	국가약품감독관리국, 《중약재생산품질관리규범(시행)中藥材生產質量管理規範(試行)》(국가약품감독관리국령 제32호) 제정·공포(2002.6.1 시행) *GAP(Good Agricultural Practice)의 중문표현은 '양호농업규범(良好農業規範)'이며 중약재 재배가 농업범주에 속하므로 농약재GAP으로 지칭. 단, 중약업계에서는 GAP을 '생산품질관리규범(生產質量管理規範)'으로 표현
2003.4	국가인증인가감독관리위원회(國家認證認可監督管理委員會; CNCA), China GAP체계 구축 구상 제시
2003.9.19	국가약품감독관리국, 중약재GAP 인증업무 개시(國食藥監安[2003]251호) - 《중약재생산품질관리규범인증관리방법(시행)中藥材生產質量管理規範認證管理辦法(試行)》 - 《중약재GAP인증검사평정표준(시행)中藥材GAP認證檢查評定標準(試行)》
2004년 초	국가인증인가감독관리위원회가 China GAP 규범 및 국가표준 제정작업 착수
2005.12.31	국가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국가표준화관리위원회, China GAP 국가표준 제정 - 중국의 법률·법규에 근거하고 Eurep GAP을 참조하여 11개의 China GAP 국가표준 GB/T 20014.1~11-2005 제정·공포(2006.5.1 시행)
2006.1.24	국가인증인가감독관리위원회, China GAP 인증메뉴얼 제정 - 2003년 제정된 《인증인가조례認證認可條例》를 참고하여 《양호농업규범인증실시규칙(시행)良好農業規範認證實施規則(試行)》(CNCA-N-004:2006) 제정·공포(2006.5 시행)
2006.8.9	국가인증인가감독관리위원회·국가표준화관리위원회, China GAP 시범사업 추진 - 《질검계통 GAP 시범사업 관련문제에 관한 통지關於質檢系統開展良好農業規範(GAP)試點工作有關問題的通知》(國認注聯[2006]29호) - 시범사업 기간 및 지역: 2007.7~2008.12. 북경, 요녕, 길림, 흑룡강, 강소, 절강, 안휘, 복건, 강서, 산둥, 하남, 광둥, 섬서, 해남, 사천 등 15개 성(직할시)
2007.1.18	국가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국가표준화관리위원회, 제1차 China GAP 시범사업 실시 - 《국가 제1차 GAP 시범사업항목 하달에 관한 통지關於下達國家第一批良好農業規範(GAP)試點項目的通知》(國認注聯[2007]5호) - 19개 성(직할시)의 286개 단위(기업, 농장 등)
2007.8	국가인증인가감독관리위원회, China GAP 인증메뉴얼 수정 및 국가표준 수정·추가 - 《양호농업규범인증실시규칙良好農業規範認證實施規則》(CNCA-N-004:2007) 제정(2008.1.1 시행) - China GAP 국가표준 일부 수정 및 24개로 확대
2008.6.27	국가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국가표준화관리위원회, 제2차 China GAP 시범사업 실시 - 《국가 제2차 GAP 시범사업항목 하달에 관한 통지關於下達國家第二批良好農業規範(GAP)試點項目的通知》(國認注聯[2007]5호) - 시범사업 기간 및 지역: 2008.7~2009.7. 북경, 하북, 산서, 상해, 강소, 절강, 안휘, 복건, 산둥, 하남, 호북, 호남, 광둥, 광서, 사천, 감숙 등 16개 성(직할시·자치구) - 16개 성(직할시·자치구)의 236개 단위(기업, 농장 등)
2010.3.17	국가인증인가감독관리위원회, China GAP 인증상황 조사 - 《GAP인증상황 조사 전개에 관한 통지關於開展良好農業規範認證情況調查的通知》(認辦注函[2010]55호)
2010.5.5	중국인증인가협회(CCAA), China GAP 인증검사원 등록 준칙 시행 - 《GAP인증검사원 등록준칙 배포에 관한 통지良好農業規範認證檢查員註冊準則》(中認協注[2010]78호)

- 중국 정부는 토지 소유권과 사용권이 분리된 농촌토지제도의 영향으로 영세분산적인 소농경영구조가 고착되어 규모화가 용이하지 않은 상황에서 GAP의 확대 실시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소농경영구조에서 GAP체계를 확대 구축할 수 있는 대안을 농민조직화에서 찾고 농식품기업과 농가가 연계되어 생산, 유통을 통합한 ‘농식품 용두기업+농가’ 유형의 생산계열화를 적극 추진하는 한편 농민협동조직 육성에도 주력하고 있음.

표 6. 중국 GAP의 운영 현황

구분		China GAP
법적근거		양호농업규범인증실시규칙(CNCA-N-004:2007)(2008.1.1 시행)
품목		GAP 국가표준이 있는 농산물 265개 품목(가축·가금류 6, 작물류 239, 수산물 20)
표시항목		GAP인증표지, 인증기관의 명칭 및 표식, 인증기관 인가기관의 명칭 및 표식,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의 명칭 및 주소, 농장 명칭 및 주소, 등록번호, 인증서 번호, 인증선택항목 및 인증등급, 인증품목범위, 인증 근거 GAP 관련기술규범 명칭 및 판본번호, 증서발급시기, 인증서 유효기간
인증구분 및 표지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align-items: center;"> <div style="text-align: center;">  <p>1급</p>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p>2급</p> </div> </div>
인증기관		국가인증인가감독관리위원회가 비준한 15개 인증기관
인증 주체	정부	국가인증인가감독관리위원회: 전문인증기관 지도감독 국가품질인증중심(CQC), 국환유기산품인증중심(OFDC) 농업부우수농산물개발서비스센터
	민간	12개 민간 전문인증기관
이력추적관리 제도		GAP 생산자는 이력추적관리 필수

□ 위해분석 및 관건통제점(危害分析和關鍵控制點, HACCP)

○ 국가인증인가감독관리위원회가 2002년 3월 20일 공포한 [식품생산기업 위해분석 및 관건통제점(HACCP)관리체계인증관리규정]은 중국 유일의 HACCP 법령임.

- 규정은 6장 22조로 구성되며 총칙, 기업의 HACCP관리체계 건립과 운영의 기본요구, 인증, 검증, 관리감독, 부칙 등을 포함함.
- 규정은 ‘수출식품 위생등기에 HACCP관리체계 평가심사가 필요한 산품 목록(이하 ‘목록’)'에 포함되는 기업은 반드시 HACCP관리체계를 구축·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표 7. 중국의 HACCP 도입 과정

시기	추진내용
1990.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舊) 국가수출입상품검사국, HACCP 이념이 포함된 ‘수출식품안전공정의 연구와 응용계획’ 실시 - 수산물 등 10종류의 식품이 계획범위에 포함
1997.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舊) 국가수출입상품검사국, 미국FDA가 주최한 수산물 HACCP 법규 및 제1기 미국HACCP관리요원 교육훈련에 전문가 5인 파견 • 교육훈련참가자 귀국 후 교육훈련 교재를 중문으로 번역하여 구 국가수출입상품검사국이 화남, 화동 및 화북지역에서 다섯 차례에 걸쳐 수산물 HACCP 법규 및 관리요원 교육훈련 개최 → HACCP 중국에 도입
1997.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舊) 국가수출입상품검사국, 180개 대 미국 수출수산물 생산기업에 대해 미국의 수산물 HACCP 법규가 규정한 요구사항 부합 여부 조사 - 139개 기업이 국가수출입상품검사국의 인가 획득 및 미국 FDA 등록 신청 → 중국 기업의 HACCP 응용 정식 전개
199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舊) 국가출입국검사검역국이 구(舊) 중국 상품검사검역연구소(현(現) 중국검사검역과학연구원) 및 검사검역시스템 전문가들과 ‘중국수출식품위생등록관리지침’ - 중국 최초의 HACCP 교육훈련 교재로서 중국의 HACCP체계 구축에 기여
2002.3.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인증인가감독관리위원회, [식품생산기업 위해분석 및 관건통제점(HACCP)관리체계인증관리규정(食品生產企業危害分析與關鍵控制點(HACCP)管理體系認證管理規定)](국가인증인가감독관리위원회 2002년 제3호 공고) 제정(2002.5.1 시행) - 식품생산기업의 HACCP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의 기본적인 요구사항, 인증, 검사·검역·검증, 관리감독에 대한 명확한 규정 제시

시기	추진내용
2002.3.2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 [수출식품생산기업 위생등록등기 관리규정(出口食品生產企業衛生註冊登記管理規定)](국가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령 제20호) 제정(2002.5.20 시행) - 통조림, 수산물, 육류 및 육류제품, 급속냉동 채소, 과일·채소즙, 급속냉동 편의식품 등 6개 종류의 고위험 수출식품 생산기업이 HACCP관리체계 구축하고 체계적인 검사·검역·검증 및 관리감독을 실시하도록 강제
2003.7.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 [식품생산가공업품질안전감독관리방법(食品生產加工企業質量安全監督管理辦法)](국가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령 제52호) - 기업의 HACCP 인증획득을 장려하는 한편 인증 및 검증 획득 기업에 대해 식품생산허가증 신청시 기업필요설비기준심사 면제 ※ 2005.9.1 [식품생산가공업품질안전감독관리실시세칙(試行)] 시행으로 폐지
2003.8.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생부, [식품안전행동계획(食品安全行動計劃)](衛法監發[2003]219호) - 식품생산경영기업의 우수위생규범(GHP)과 HACCP체계 구축 촉구
2004.6.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 SN/T1443.1-2004 [식품안전관리체계 요구(食品安全管理體系要求)] 표준 및 SN/T1443.2-2004 [식품안전관리체계심사지침(食品安全管理體系審核指南)] 표준 제정(2004.12.1 시행) - HACCP 원리를 포함한 식품안전관리 원칙을 제시함으로써 HACCP 체계를 HACCP을 핵심으로 하는 식품안전관리체계('HACCP 식품안전관리체계'로 칭함)로 계통적으로 발전시킨 것으로 평가 - 위 표준은 중국이 지식재산권을 가진 첫 번째 식품안전관리체계의 건립, 인증, 검증, 관리감독 표준으로서 각종 식품 및 그 원료의 생산, 가공, 포장, 저장, 운송, 판매 또는 소비를 제공하는 어떠한 조직에도 적합한 것으로 평가 - 위 표준은 HACCP 체계를 핵심으로 하여 식품위생의 기초적인 요구사항을 추가하고 관리체계 요소를 포함하여 식품기업의 원료공급관리부터 최종소비자의 식용안전보장에 이르기까지의 전 과정에 대해서 규범성 안전관리와 조작요구사항을 제공하고 식품체인을 아우르는 전 과정 식품안전관리체계를 규정하고 있음.
2009.2.2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안전법」(2009.6.1 시행) - 국가는 식품 생산경영기업이 GMP 요구조건을 충족하도록 장려하고, HACCP를 실시하여 식품안전관리 수준을 제고하도록 규정(제33조)

○ 국가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의 관리를 받는 국가인증인가감독관리위원회가 전국 HACCP 관리체계인증인가 업무를 통일적으로 관리, 감독 및 종합조정하고, HACCP 관리체계의 실시와 출입국검사검역국의 검증업무를 관리 감독하며, ‘목록’의 조정과 공포를 책임지고 있음.

- HACCP 관리체계의 인증은 국가인증인가감독관리위원회의 기준을 획득하고 관련규정에 따라 국가인가기관의 자격인가를 획득한 기관이 담당함.

- 국가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이 지방에 설립한 출입국검사검역국이 해당 지역내 기업의 HACCP 관리체계 검증 업무를 담당하며,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HACCP 검증 증서를 발급함.

□ 원산지표시제도

- 중국은 농식품 표시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농식품 표시의 규범화, 품질사기 방지, 농식품 기업 및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7년 8월 [식품표시관리규정]을 제정하였음.
 - 이 규정은 2009년 2월 「식품안전법」 제정을 계기로 한차례 수정을 거쳐 2010년 6월 1일자로 시행되고 있음.
 - 수정된 규정은 총 5장 41조로 이루어졌으며, 식품표시의 표시내용(2장), 표시형식(3장) 등을 규정하고 있음.
- 농식품의 원산지 표시와 관련하여 수정된 [규정] 제7조는 시급(市級) 지역을 기준으로 식품의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명시하고 있음.
 - 또한 제33조에서는 농식품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경우 「생산물품질법(產品質量法)」에 의거하여 해당 농식품을 몰수하고 판매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해당 농식품의 판매소득을 몰수하고 상황이 엄중한 경우 영업허가를 취소하도록 규정하였음.
- 농식품 표시의 관리감독 주무기관은 국가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이며, 현(縣)급 이상 지방정부의 품질기술감독국이 해당 행정구역내 농식품 표시 관리감독 업무를 책임짐([규정] 제4조).

- 중국은 우리나라와 일본에서 운영하고 있는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는 시행하고 있지 않음.

□ 「식품안전법」상의 수출입 농식품 안전관리

- 중국의 수출입 농식품 안전관리는 수출입 농식품 검사검역체계를 근간으로 함. 중국의 식품안전관련 최고 상위법인 「식품안전법」은 제6장 ‘식품수출입’에서 수출입식품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를 규정함.
- 「식품안전법」은 식품안전 국가표준이 없는 식품 또는 처음으로 수입되는 식품첨가제 신제품, 식품관련제품의 신제품에 대해 수입상이 국무원 위생부에 수입신청서를 제출하고 안전평가자료를 제출토록 규정함(63조).
 - 위생부는 본 법의 제44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수입 허가여부를 결정하고 적시에 상응한 식품안전 국가표준을 제정토록 함.
- 「식품안전법」 제64조는 외국에서 발생한 식품안전사고가 중국 국내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거나 또는 수입식품에서 심각한 식품안전 문제를 발견한 경우 국가출입국검사검역국은 즉시 위험조기경보 또는 통제조치를 취하고 위생부, 농업부, 공상행정관리총국 등에 통보토록 함.
 - 통보를 받은 각 부문은 즉시 관련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함.
- 「식품안전법」은 중국에 농식품을 수출하는 국외 농식품생산기업, 수출상, 대리상의 국가출입국검사검역총국 등록제도를 규정함(제65조). 또한 국가

출입국검사검역총국이 등록한 수출상, 대리상과 국외 식품생산기업 명단을 정기적으로 공표하도록 함.

- 「식품안전법」은 수입포장식품은 중문 라벨, 중문 설명서를 반드시 첨부하도록 규정함(제66조).
 - 라벨 및 설명서는 「식품안전법」 및 중국의 기타 관련 법률, 행정법규와 식품안전 국가표준의 요건에 부합해야 하고 식품 원산지 및 국내 대리상 명칭, 주소, 연락처를 표기토록 함.
 - 포장식품에 중문 라벨, 중문 설명서가 없거나 또는 라벨 및 설명서가 규정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수입을 금지함.
- 「식품안전법」은 수입상의 식품 수입 및 판매 기록제도를 규정하고 있음(제67조). 기록할 내용은 식품의 명칭, 규격, 수량, 생산일자, 생산 또는 수입 일련번호, 유통기한, 수출상과 구매상 명칭 및 연락방식, 납품일자 등임. 식품의 수입 및 판매기록은 사실에 부합되어야 하고 보관기한은 2년 이상임.
- 「식품안전법」은 국가출입국검사검역총국이 수출입식품의 안전정보를 수집, 총괄하고 제때에 관련 부문, 기구와 기업에 통보토록 규정함(제69조). 또한 국가출입국검사검역국이 수출입식품의 수입상, 수출상과 수출식품 생산기업의 신용기록제도를 수립하고 이를 공표토록 함. 불량기록의 수입상, 수출상과 수출식품 생산기업에 대해서는 해당 수출입식품에 대한 검사검역을 강화하도록 하였음.

3. 비교 및 시사점

- 2000년대 이후 중국은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식품안전정책을 강화하는 세계적인 추세를 반영하여 식품안전관련 개별법령을 총괄하는 상위법을 제정하였음.
- 우리나라는 기존의 개별법령을 유지하면서 ‘기본법’적 성격의 「식품안전기본법」을 제정한 반면 중국의 경우 「식품안전법」이 선행법률인 「식품위생법」을 완전히 대체하였음.
- 우리나라의 「식품안전기본법」과 중국의 「식품안전법」 모두 식품안전과 관련된 법률의 기본법으로서 식품안전정책 기초가 ‘식품위생’으로부터 ‘식품안전’으로 전환되고 있는 세계적인 추세를 반영하고 있음.
- 우리나라와 중국의 식품안전관리체계는 여러 기관이 업무를 분담하는 다원화체계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음. 그러나 주요기관의 역할·기능 등 구체적인 형태에는 다소 차이가 존재함.
- 우리나라는 농림수산물식품부, 보건복지부가 농수축산식품의 위험관리와 위험평가 등을 취급단계별, 품목별로 분담하여 안전관리를 실시함. 또한 식품안전정책위원회가 설립되어 식품안전관련 업무를 종합·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중국도 「식품안전법」에 근거하여 식품안전 업무와 관련한 최고심의기구 성격을 지니는 식품안전위원회를 설립하였음. 그러나 실질적인 식품안전 관련 업무의 총괄·조정과 식품안전기준 설정은 위생부가 담당함.
 - 위험관리는 취급단계별로 생산부터 소비단계까지 농업부, 국가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국가식품약품관리감독국 등이 업무를 구분하여 담당하는 기관이 상이함.
- 우리나라와 중국은 식품안전관리를 위해 다양한 제도·정책 등을 시행하고 있음. 특히 유기인증, GAP, HACCP, 원산지 표시제도는 이들 국가에서 공통으로 시행되고 있는 제도임.
 - 이러한 제도의 운영 취지는 식품의 안전성 확보, 국내 제품의 대외 경쟁력 제고, 높은 품질의 제품 보호 등으로 국가간에 유사한 측면이 있음. 그러나 제도의 세부내용과 시행체계 등에는 다소의 차이가 존재함.
- GAP의 경우 우리나라는 전품목을 대상으로 인증을 실시하여 중국에 비해 대상품목이 광범위한 것이 특징임.
 - 그러나 중국이 1급과 2급으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1급에 대해서는 국제적인 기준을 바탕으로 하여 국제적 동등성(Global GAP)을 인정받고 있는 데 비해 우리나라는 단일한 인증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나 국제적인 동등성은 확보하고 있지 못함.
- 유기인증의 경우 중국은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무공해농산물, 녹색식품 등의 별도의 친환경적 농산물에 대한 개념이 존재한다는 점에서는 유사한 점이 있음.

- 그러나 중국이 유기식품에 대해서는 별도로 독립하여 국제규정과 동일하게 단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데 비해, 우리나라는 무농약농산물을 친환경인증제도라는 단일한 법령체계하에서 유기인증과 함께 관리함.
 - 중국이 유기농산물과 가공식품에 대해서 동일한 법령하에서 인증하고 있는데 비해 우리나라는 유기농산물은 「친환경농업육성법」, 유기가공식품은 「식품산업진흥법」에 근거하여 인증을 실기함.
 - 중국과 우리나라 모두 유기인증 과정에서 정부가 관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제도적 유사성이 있음.
- HACCP의 경우 우리나라는 농식품부와 보건복지부로 이원화되어 있는데 반해 중국은 국가인증인가감독관리위원회가 HACCP 업무를 통일적으로 관리하고 있음. 우리나라와 중국 모두 국가 주도로 HACCP제도를 추진하고 있다는 제도적 유사성이 있음.
- 중국과 우리나라 모두 원산지 표시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농산물 및 가공식품 등에 대한 원산지 표시와 함께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우리나라와 달리 중국은 아직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도는 운영하고 있지 않음.

〈부록 1〉

농산물품질안전법 (주석령 제49호)

2006년 4월 29일 제10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1차 회의 통과

제1장 총 칙

- 제1조 농산물의 품질안전을 보장하고, 공중보건을 유지·보호하며, 농업과 농촌경제의 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이 법을 제정한다.
- 제2조 본 법률에서 “농산물”은 농업생산 활동을 통해서 획득한 식물, 동물, 미생물 및 그 상품을 의미한다. 본 법률에서 “농산물 품질안전”은 농산물의 품질이 사람들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요구에 부합하고 이를 보장하는 것을 의미한다.
- 제3조 현(縣)급 이상 인민정부의 농업행정부문은 농산물 품질안전의 관리 감독을 책임진다. 현(縣)급 이상 인민정부의 유관부문은 업무분담에 따라 농산물 품질안전과 관련된 업무를 책임진다.
- 제4조 현(縣)급 이상 인민정부는 마땅히 농산물 품질안전 관리 업무를 해당 인민정부의 국민경제 및 사회발전 계획에 포함시키는 한편 농산물 품질안전 업무와 관련된 경비를 할당하여 농산물 품질안전 업무의 수행시 사용해야 한다.
- 제5조 현(縣)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는 해당 행정구역 내의 농산물 품질안전 업무를 통일적으로 지도하고 협조하는 한편 관련된 조치를 실시하고, 건전한 농산물 품질안전 서비스체계를 구축하여 농산물 품질안전 수

준을 제고해야 한다.

제6조 국무원 농업행정부문은 관련 전문가를 주축으로 농산물 품질안전 위험평가 전문가위원회를 설립해야 하며, 농산물 품질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잠재적인 위험요소에 대해 분석하고 평가해야 한다.

제7조 국무원 농업행정부문과 성·자치구·직할시 인민정부 농업행정부문은 직책과 권한에 따라 마땅히 농산물 품질안전 현황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제8조 국가는 농산물 생산의 표준화를 인도하고 확대해야 하며 우수품질의 농산물 생산을 격려하고 지원해야 한다. 또한 국가가 규정한 농산물 품질안전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농산물의 생산과 판매를 금지해야 한다.

제9조 국가는 농산물 품질안전에 관한 과학기술 연구를 지원해야 하며, 과학적인 품질안전 관리 방법을 널리 시행하고 선진적이고 안전한 생산기술을 보급해야 한다.

제10조 각급 인민정부 및 유관부문은 농산물 품질안전에 관한 지식을 널리 선전하고 인민대중의 농산물 품질안전에 관한 의식을 제고시켜야 한다. 또한 농산물 생산자 및 판매자들의 품질안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도록 인도하고 농산물 소비의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

제2장 농산물 품질 안전 표준

제11조 국가는 건전한 농산물 품질안전 표준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농산물 품질안전 표준은 강제성을 지닌 기술규범이다. 농산물 품질안전 표준의 제정과 공포는 관련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의거하여 집행해

야 한다.

제12조 농산물 품질안전 표준은 마땅히 농산물 품질안전 위험평가 결과를 충분히 고려하고 농산물 생산자, 판매자 및 소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정하여야 하며 안전한 소비를 보장해야 한다.

제13조 농산물 품질안전 표준은 과학기술의 발전 및 농산물 품질안전에 대한 요구에 근거해야 하며 적기에 수정되어야 한다.

제14조 농산물 품질안전 표준은 농업행정부문과 유관부문이 조직하여 실시한다.

제3장 농산물 산지

제15조 현(縣)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의 농업행정부문은 농산물의 품질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농산물 품종의 품종 특성과 생산지역의 대기, 토양, 유독유해물질 상황 등에 근거하여 특정 농산물의 생산에 적합하지 않다고 여겨지면 생산지역의 폐쇄를 제기하고 해당 행정구역 인민정부의 비준을 거쳐 이를 공포해야 한다.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원 농업행정부문과 국무원 환경보호 행정부문이 정한다. 농산물 생산 금지 구역의 조정은 앞 조항이 규정한 순서에 따라 처리한다.

제16조 현(縣)급 이상 인민정부는 마땅히 각종 조치를 실시하여 농산물 생산기지 건설을 강화하고 농산물의 생산조건을 개선해야 한다. 현(縣)급 이상 인민정부의 농업행정부문은 농산물 품질안전을 보장하는 표준화 생산 종합시범지역, 시범농장, 양식구역, 동식물 방역구역의 건설을 추진해야 한다.

제17조 유독유해물질이 규정된 기준보다 초과한 지역에서는 식용농산물의

생산, 포획, 채집 및 농산물 생산기지 건설을 금지한다.

제18조 농산물 산지에 폐수, 배기가스, 고체 폐기물 혹은 기타 유해유독물질을 배출하거나 흘려보내는 것은 법률, 법규의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로 금지한다.

제19조 농산물 생산자는 화학비료, 농약, 수의약, 농업용 비닐 등 화공제품을 합리적으로 사용하여 농산물 산지가 오염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4장 농산물 생산

제20조 국무원 농업행정부문과 성·자치구·직할시 인민정부 농업행정부문은 농산물 품질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생산기술 요구사항과 조작규정을 제정해야 한다. 현(縣)급 이상 인민정부의 농업행정부문은 농산물 생산에 대한 지도를 강화해야 한다.

제21조 농산물 품질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농약, 수의약, 사료 및 사료첨가제, 비료, 수의기계 등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과 행정법규의 규정에 의거하여 허가제도를 실시한다. 국무원 농업행정부문과 성·자치구·직할시 인민정부 농업행정부문은 농산물 품질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농약, 수의약, 사료 및 사료첨가제, 비료 등 농업투입재에 대해 추출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포해야 한다.

제22조 현(縣)급 이상 인민정부의 농업행정부문은 농업투입재의 사용에 대한 관리와 지도를 강화하고 농업투입재의 안전사용제도를 건립해야 한다.

제23조 농업기술 연구 및 교육기관과 농업기술 보급기관은 농업생산자에게 품질안전 지식과 기술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제24조 농산물 생산기업과 농민 협동경제조직은 농산물의 생산 기록을 작성하고, 아래의 사항을 사실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1) 사용한 농업투입재의 명칭, 출처, 사용처, 용법, 용량 및 사용, 사용중지 날짜

(2) 동물 전염병, 식물 병충해의 발생 및 방제 상황

(3) 수확, 도축 또는 포획한 날짜

농산물의 생산기록은 2년 동안 보관해야 한다. 농산물 생산기록의 위조를 금지한다. 국가는 기타 농산물 생산자도 농산물 생산기록을 작성하도록 권고해야 한다.

제25조 농산물 생산자는 법률, 행정법규와 국무원 농업행정부문의 규정에 따라 농업투입재를 합리적으로 사용하고, 농업투입재 사용의 안전 간격기(間隔期) 혹은 휴약기(休藥期) 규정을 엄격하게 집행하고, 농산물 품질안전에 위험이 미치지 않도록 예방해야 한다. 농산물 생산과정에서 국가가 사용을 금지한 농업투입재의 사용을 금지한다.

제26조 농산물 생산기업과 농민협동경제조직은 스스로 혹은 검사기관에 위탁하여 농산물 품질안전 상태에 대한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검사에서 농산물 품질안전 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판명된 농산물은 판매를 금지한다.

제27조 농민협동경제조직과 농산물 품목협회는 그 구성원에게 적기에 생산 기술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며 농산물 품질안전 관리 제도를 마련하고, 농산물 품질안전 제어체계를 구축하여 자율적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제5장 농산물 포장과 표시

제28조 농산물 생산기업, 농민협동경제조직, 농산물 수매에 종사하는 단위 및 개인 판매자의 농산물은 규정에 따라 포장하거나 부가적인 표지를 한 후에 판매할 수 있다. 포장물 혹은 부가적인 표지에는 반드시 상품명, 산지, 생산자, 생산날짜, 유통기한, 품질 등급 등의 내용이 표시되어 있어야 한다. 또한 규정에 따라 첨가제의 명칭도 표시되어야 한다.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원 농업행정부문이 제정하도록 한다.

제29조 농산물의 포장, 신선도 유지, 저장, 운송 중 사용된 신선유지제, 방부제, 첨가제 등의 재료는 국가의 강제적인 관련 기술규범에 부합되어야 한다.

제30조 유전자변형 농산물은 유전자변형 농산물 안전관리와 관련된 규정에 따라 표식을 실시해야 한다.

제31조 법률의 필요에 따라 검역을 실시한 동식물 및 그 상품은 검역합격 표지, 검역합격 증명을 부착해야 한다.

제32조 판매되는 농산물은 반드시 농산물 품질안전 표준에 부합되어야 하며, 생산자는 무공해농산물 표지의 사용을 신청할 수 있다. 국가규정에 부합하는 농산물 중 품질이 우수한 농산물의 생산자는 그에 상응하는 농산물 품질 표지의 사용을 신청할 수 있다. 앞 조항이 규정한 농산물 품질 표지의 위조를 금지한다.

제6장 감독 및 검사

제33조 아래 사항에 하나라도 해당하는 농산물은 판매를 금지한다.

- (1) 국가가 사용을 금지한 농약, 수의약 또는 기타 화학물질을 함유한 것
- (2) 농산물 품질안전 표준에 부합되지 않는 농약, 수의약 등 화학물질이 잔류하거나 혹은 중금속 등의 유독유해물질이 포함되어 있는 것
- (3) 병원성 기생충, 미생물 혹은 생물독소 등을 포함하여 농산물 품질안전 표준에 부합되지 않는 것
- (4) 국가의 강제성 기술규범에 부합하지 않는 신선유지제, 방부제, 첨가제 등을 사용한 것
- (5) 기타 농산물 품질안전 표준에 부합하지 않는 것

제34조 국가는 농산물 품질안전 검사제도를 건립해야 한다. 현(縣)급 이상 인민정부의 농업행정 부문은 농산물의 품질안전 요구를 보장하기 위해 농산물 품질안전 검사계획을 제정하고 실시해야 한다. 또한 생산 중이거나 혹은 시장에서 판매 중인 농산물에 대해 추출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추출검사 결과는 국무원 농업행정부문 혹은 성·자치구·직할시 인민정부 농업행정부문에서 그 권한에 따라 공포해야 한다. 추출검사에 대한 감독은 본 법률 제35조의 규정에 부합하는 농산물 품질안전 검사기관에 위탁하여 진행하되 피검사자로부터 비용을 수취해서는 안 되고 추출하는 샘플의 수는 국무원 농업행정부문이 규정한 수량을 초과할 수 없다. 상급 농업행정부문이 추출검사를 진행한 농산물은 하급의 농업행정부문이 중복해서 추출검사를 할 수 없다.

제35조 농산물 품질안전 검사는 현존하는 조건에 부합하는 검사기관을 충분히 이용해야 한다. 농산물 품질안전 검사에 종사하는 기관은 반드시 상응하는 검사조건과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성급 이상 인민정

부의 농업행정부문 혹은 그 권한을 부여받은 부문이 합격심사를 해야 한다.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원 농업행정부문이 제정한다. 농산물 품질안전 검사관은 법에 의거하여 검사를 실시하고 합격을 인증해야 한다.

제36조 농산물 생산자, 판매자는 추출검사의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그 결과를 통보받은 5일 내에 농산물 품질안전 추출검사를 실시한 농업행정부문 혹은 상위의 농업행정부문에 재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국무원 농업행정부문과 유관부문이 인정한 빠른 검사 방법을 채택하여 농산물 품질안전 추출검사를 실시하고, 피검사자는 검사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결과를 통보받은 시점으로부터 4시간 이내에 재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재검사는 빠른 검사 방법을 사용할 수 없다. 검사결과가 잘못되어 당사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법률에 의거하여 배상책임을 진다.

제37조 농산물 도매시장은 시장에서 판매하는 농산물의 품질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직접 농산물 품질안전 검사기구를 설립하거나 검사기관에 위탁하여 추출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농산물 품질안전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농산물을 발견했을 경우 판매자는 즉시 판매를 중지하고 농업행정부문에 보고해야 한다.

제38조 국가는 단체나 개인이 농산물 품질안전에 대하여 감독하는 것을 장려한다. 어떠한 단체나 개인도 본 법률에 위배되는 행위에 대하여 고발하고, 고소할 권리가 있다. 관련부분은 고발이나 고소를 접수했을 경우 즉시 이를 처리해야 한다.

제39조 현(縣)급 이상 인민정부의 농업행정부문은 농산물 품질안전 검사 과정에서 생산, 판매하는 농산물에 대한 현장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며, 농산물 품질안전과 관련된 상황을 조사 및 파악할 수 있으며, 농산물 품질안전과 관련된 기록 및 기타 자료를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으며, 농산물 품질안전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농산물에 대해서는 차압, 압류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제40조 농산물 품질안전 사고가 발생한 경우 유관 단체와 개인은 제어조치를 실시해야 하며, 즉시 산지의 향급 인민정부와 현(縣)급 인민정부의 농업행정부문에 보고해야 한다. 보고를 접수한 기관은 이를 즉시 처리하고 상위 인민정부와 유관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중대한 농산물 품질안전 사고가 발생한 경우 농업행정부문은 즉시 동급의 식품약품관리감독부문에 통보해야 한다.

제41조 현(縣)급 이상 인민정부 농업행정부문은 농산물 품질안전 검사과정에서 본 법률 제33조에서 열거한 사항에 해당하는 농산물을 발견한 경우 농산물 품질안전에 대한 책임추궁제도에 의거하여 조사를 통해 책임자를 명확히 하고 법률에 의거하여 처리하거나 처리의견을 제시해야 한다.

제42조 수입 농산물은 반드시 국가가 규정한 농산물 품질안전 표준에 의거하여 검사를 진행해야 한다. 농산물 품질안전과 관련된 표준을 아직 제정하지 않은 경우 법률에 의거하여 즉시 제정해야 하며, 제정되기 이전에는 국가 유관부문이 지정한 국외의 관련 표준을 참고하여 검사를 진행할 수 있다.

제7장 법률책임

제43조 농산물 품질안전 관리감독 담당자가 법에 의거하지 않고 감독을 실시

하거나 직권을 남용하였을 경우 법률에 의거하여 행정처분을 받는다.

제44조 농산물 품질안전 검사기관이 검사 결과를 조작했을 경우 곧바로 시정하도록 하고 위법적인 소득을 몰수하며 5만 위안 이상 15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관리자와 기타 직접적인 책임자는 1만 위안 이상 5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사태가 심각한 경우 검사 자격을 박탈하고 손실을 야기한 경우 법률에 의거하여 배상책임을 지도록 한다. 농산물 품질안전 검사기관의 검사결과가 정확하지 않고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법률에 의거하여 배상의 책임을 진다. 중대한 손실을 입힌 경우에는 검사자격을 박탈한다.

제45조 법률 및 법규 규정을 위반하고 농산물 산지에 폐수, 배기가스, 고체 폐기물 혹은 기타 유해유독물질을 배출한 경우에는 환경보호 관련 법률 및 법규의 규정에 의거하여 벌금을 부과한다. 손실을 입힌 경우에는 법률에 의거하여 배상의 책임을 진다.

제46조 법률, 행정법규 및 국무원 농업행정부문의 규정에 위반되는 농업투입재를 사용한 경우 관련 법률 및 행정법규의 규정에 의거하여 벌금을 부과한다.

제47조 농산물 생산기업, 농민협동경제조직이 농산물 생산기록을 아예 작성하지 않거나 규정대로 작성하지 않거나 혹은 위조한 경우 기한 내에 시정을 명령하고 기한 내에 시정하지 않은 경우 2천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48조 본 법률 제28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규정대로 포장 및 표지를 하지 않고 농산물을 판매하는 경우 기한 내에 시정을 명령하고 기한 내에 시정하지 않은 경우 2천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49조 본 법률 제33조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국가의 강제성 기술규범에

부합하지 않은 신선유지제, 방부제, 첨가제 등 재료를 사용한 경우 판매정지를 명령하고 오염된 농산물에 대해서는 무해처리하고 무해처리가 불가능한 것은 소각한다. 위법적인 소득은 몰수하고 2천 위안 이상 2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50조 농산물 생산기업, 농민협동경제조직이 본 법률 제 33조 제1항에서 제3항 혹은 제5항에 해당하는 농산물을 판매한 경우 판매정지를 명령하고 이미 판매한 농산물은 즉시 회수하며 법률을 위반하여 판매한 농산물에 대해서는 무해처리하거나 혹은 소각한다. 위법적인 소득은 몰수하고 2천 위안 이상 2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농산물 판매기업이 판매한 농산물 중 앞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이 있는 경우 앞의 규정에 의거하여 처리하고 처벌한다. 농산물 도매시장에서 판매한 농산물 중 본 조항 첫 번째 규정에 해당하는 것이 있는 경우 법률을 위반하여 판매한 농산물은 첫 번째 규정에 의거하여 처리하고 농산물 판매자는 첫 번째 규정에 의거하여 처벌한다. 농산물 도매시장이 본 법률 제37조 첫 번째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시장을 명령하고 2천 위안 이상 2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51조 본 법률 제32조 규정을 위반하여 농산물 품질 표지를 위조한 경우에는 시장을 명령하고 위법적인 소득은 몰수하며 2천 위안 이상 2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52조 본 법률 제44조, 제47조에서 제49조, 제50조 제1항 및 제4항과 제51조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현(縣)급 이상 인민정부 농업행정부문의 결정에 따라 처리하고 처벌한다. 본 법률 제50조 제2항, 제3항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공상행정 관리부문의 결정에 따라 처리하고 처벌한다. 행정 처벌 및 처벌기관에 대한 법률은 기타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을 따르도록 한다. 그러나 동일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중복해서 처벌할 수 없다.

제53조 본 법률 규정을 위반하여 범죄를 구성한 경우 본 법률에 의거하여 형사책임을 지도록 한다.

제54조 본 법률 제33조에서 열거한 농산물을 생산, 판매하여 소비자의 손실을 야기한 경우 법률에 의거하여 배상의 책임을 진다. 농산물 도매시장에서 판매하는 농산물이 앞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소비자는 농산물 도매시장에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생산자, 판매자의 책임인 경우 농산물 도매시장은 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소비자도 직접적으로 농산물 생산자, 판매자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장 부 칙

제55조 돼지 도축의 관리는 국가의 유관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제56조 본 법률은 2006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록 2〉

식품안전법 (주석령 제9호)

2009년 2월 28일 제11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7차 회의 통과

제1장 총 칙

제1조 식품안전을 보장하고, 국민의 생명 안전과 신체 건강을 보장하기 위하여 본 법을 제정한다.

제2조 중화인민공화국 안에서 아래 각 항의 활동에 종사하는 경우 반드시 본 법을 준수해야 한다.

- (1) 식품 생산·가공(이하 식품생산이라 칭함), 식품 유통 및 요식서비스(이하 식품경영이라 칭함)
 - (2) 식품첨가제의 생산·경영
 - (3) 식품에 사용하는 포장재료, 용기, 세척제, 소독제 및 식품 생산·경영에 사용하는 도구와 설비(이하 식품관련제품이라 칭함)의 생산·경영
 - (4) 식품 생산·경영자의 식품첨가제 및 식품관련제품 사용
 - (5) 식품, 식품첨가제 및 식품관련제품에 대한 안전관리
- 식용으로 제공되는 1차 농산물(이하 식용농산물이라 칭함)의 품질안전 관리는 「중화인민공화국 농산물품질안전법」의 규정을 준수한다. 단, 식용농산물의 품질안전표준을 제정하거나 식용농산물의 안전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할 경우 반드시 본 법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조 식품 생산·경영자는 법률, 법규 및 식품안전 표준에 의거하여 생산·경영 활동에 종사해야 하며, 사회와 국민에 대한 책임을 지고 식품안전을 보장하며 사회의 감독을 받고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한다.

제4조 국무원의 식품안전위원회를 설립하고, 위원회의 업무와 직책은 국무원 규정에 따른다.

국무원 위생행정부문은 식품안전을 종합적으로 조절하는 직무를 맡아 식품안전 위험 평가, 식품안전 표준 제정, 식품안전 정보 공개, 식품검사기구의 자격인증 조건과 검사 규범의 제정을 책임지고 식품안전 중대사고의 조사 및 처리를 담당한다. 국무원의 품질감독, 공상행정관리 및 관리부문은 본 법과 국무원이 규정한 직책에 의거하여, 식품 생산 및 유통, 요식서비스 활동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실시한다.

제5조 현(縣)급 이상의 지방인민정부는 해당 행정구역의 식품안전관리감독 업무에 대해서 통일적으로 지도, 조직, 협조·책임지며, 건전한 식품안전 전 과정에 대한 관리감독 업무체계를 수립한다. 식품안전 돌발사건 처리업무를 통일적으로 지도·지휘하고 식품안전 관리감독책임제를 도입하여 식품안전 관리감독부문에 대한 평가와 심사를 실시한다. 현(縣)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본 법과 국무원의 규정에 의거하여 해당 현의 위생행정, 농업행정, 품질감독, 공상행정관리, 식약품관리감독부문의 식품안전 관리감독 직무와 책임을 확정한다. 관련기관은 각자의 직무와 책임안의 범위에서 해당 행정구역의 식품안전 관리감독 업무를 책임진다.

상부 인민정부 소속기관이 하부 행정구역에 설치한 기구는 해당 행정구역 인민정부의 통일적인 조직 및 협조 하에 법에 의거하여 식품안전 관리감독업무를 수행한다.

제6조 현(縣)급 이상 위생행정, 농업행정, 품질감독, 공상행정관리, 식약품 관리감독부문은 교류를 강화하고 긴밀하게 협력하며, 각자의 직무와 책임에 의거하여 업무를 분담하고 법률에 의거하여 직권을 행사하고 책임진다.

제7조 식품협회는 업계 자율성을 강화하고 식품 생산·경영자가 법에 의거하여 생산·경영활동을 하도록 지도하는 한편 업계의 신용도를 높이고, 식품안전 지식을 홍보, 보급한다.

제8조 국가는 사회단체나 지역자치조직이 식품안전 법률, 법규 및 식품안전 표준과 지식의 보급 업무를 추진하는 것을 장려하고, 건강한 식사 방법을 계몽하며, 소비자의 식품안전 의식과 자아보호 능력을 강화시킨다.

뉴스매체는 식품안전 법률, 법규 및 식품안전 표준과 지식의 선전을 전개하고 본 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 여론 감독을 실시한다.

제9조 국가는 식품안전 관련 기초연구와 응용연구를 수행하고, 식품 생산·경영자가 식품안전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선진 기술과 관리규범을 도입하는 것을 장려하고 지원한다.

제10조 임의의 단체 또는 개인은 식품 생산·경영 과정에서 본 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고발하고 관리부문에 식품안전 정보 공개를 요구할 권리를 가지며, 식품안전 관리감독 업무에 의견을 제시하고 건의할 수 있다.

제2장 식품안전 위험모니터링과 평가

제11조 국가는 식품안전 위험모니터링제도를 수립하여 식원성 질병, 식품 오염 및 식품에 함유되어 있는 위해요소들을 모니터링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위생행정부문은 국가 식품안전 위험모니터링 계획에 근거하고 해당 행정구역의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자체적으로 해당 행정구역의 식품안전 위험모니터링 방안을 제정, 실시한다.

제12조 국무원의 농업행정, 품질감독, 공상행정관리와 관리감독 등 관련부문은 식품안전 위험도관련 정보를 인지한 경우, 즉시 국무원의 위생행정부문에 통보해야 한다. 국무원의 위생행정부문은 관련부문과 함께 정보에 대해서 확인한 후 즉시 식품안전 위험모니터링계획을 조정해야 한다.

제13조 국가는 식품안전 위험 평가 제도를 수립하여 식품, 식품첨가제에 함께 포함되어 있는 생물학적 화학적 물리적인 위해요소에 대해서 위험 평가를 진행한다.

국무원 위생행정부문은 식품안전 위험 평가 업무를 조직할 책임이 있으며 의학, 농업, 식품, 영양 등 방면의 전문가로 식품안전 위험 평가 전문가위원회를 설립하여 식품안전 위험 평가를 진행한다.

농약, 비료, 성장조절제, 수의약, 사료 및 사료첨가제 등 품목에 대한 안전성 평가에는 식품안전 위험 평가 전문가위원회의 전문가가 참가해야 한다.

식품안전 위험 평가는 반드시 과학적인 방법을 운용하고 식품안전 위험모니터링정보와 과학적인 데이터 및 관련 정보에 근거하여 진행한다.

제14조 국무원의 위생행정부문은 식품안전 위험모니터링 혹은 안전을 위해 할 가능성이 있는 식품에 대한 고발을 접수하는 즉시 검사와 식품안전 위험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제15조 국무원의 농업행정, 품질감독, 공상행정관리 및 국가식약품관리감독 등 관련부문은 국무원 위생행정부문에 식품안전 위험 평가에 관해 건의하고, 관련 정보와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제16조 식품안전 위험 평가결과는 식품안전 표준의 제정 및 수정과 식품안전에 대한 관리감독 실시의 과학적 근거이다.

식품안전 위험 평가 결과 식품이 안전하지 않다는 결론이 난 경우 국무원의 품질 감독, 공상행정관리 및 관리감독부문은 각자의 직무와 책임에 의거하여 즉시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고, 해당 식품의 생산·경영을 중지시키고 소비자에게도 섭취하지 않도록 알려야 한다. 식품안전과 관련된 국가표준을 제정, 수정할 필요가 있을 시 국무원 위생행정부문은 즉시 제정, 수정해야 한다.

제17조 국무원 위생행정부문은 국무원의 관련부문과 함께 식품안전 위험 평가 결과와 식품안전 관리감독 정보에 근거하여 식품안전 현황에 대해 종합적으로 분석을 실시해야 한다. 종합적인 분석 결과를 토대로 비교적 높은 위험도를 지니고 있을 것으로 판명된 식품에 대해서 국무원 위생행정부문은 즉시 식품안전 위험을 경보해야 한다.

제3장 식품안전표준

제18조 식품안전표준의 제정은 국민의 신체건강 보장을 취지로 해야 하고 과학적, 합리적이며 안전하고 신빙성이 있어야 한다.

제19조 식품안전표준은 강제성 표준으로 식품안전표준외에 식품안전에 관한 기타 강제성 표준을 제정해서는 아니 된다.

제20조 식품안전표준에 포함되는 내용

- (1) 식품, 식품관련제품중의 병원성 미생물, 농약잔류물, 수의약 잔류물, 중금속, 오염물질 및 기타 인체건강에 해가 되는 물질의 허용치 규정
- (2) 식품첨가제의 품목, 사용범위, 사용량
- (3) 영·유아와 기타 특정대상에 공급되는 주·보조식품의 영양성분 요건
- (4) 식품안전, 영양과 관련된 라벨, 표시 및 설명서에 대한 요건
- (5) 식품생산·경영과정의 위생요건
- (6) 식품안전 관련 품질요건
- (7) 식품검사방법과 규정
- (8) 식품안전표준으로 제정할 필요가 있는 기타 내용

제21조 국무원 위생행정부문은 식품안전 국가표준의 제정, 공표를 책임지며 국무원 표준화행정부문은 국가표준 일련번호를 제공한다.

식품 중 농약잔류물, 수의약 잔류물의 한계치 규정 및 그 검사방법과 규정은 국무원 위생행정부문, 국무원 농업행정부문이 제정한다.

도축용 가축의 검역검사 규정은 국무원 관련 주관부문이 국무원 위생행정부문과 함께 제정한다.

관련 제품의 국가표준이 식품안전 국가표준에 규정된 내용에 관련이 될 경우 식품안전 국가표준에 부합되어야 한다.

제22조 국무원 위생행정부문은 현행 식용농산물 품질안전표준, 식품위생표준, 식품품질표준 및 식품 관련 업계표준 중 강제 시행한 표준을 통합하여 식품안전 국가표준으로 총괄 공표해야 한다.

본 법에서 규정한 식품안전 국가표준을 공표하기 전, 식품생산·경영자는 현행 식용농산물 품질안전표준, 식품위생표준, 식품품질표준 및

식품 관련 업계표준에 의거하여 식품을 생산·경영해야 한다.

제23조 식품안전 국가표준은 식품안전 국가표준 심사평가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통과되어야 한다. 식품안전 국가표준 심사평가위원회는 의학, 농업, 식품, 영양 등 분야의 전문가와 공무원 관계부문의 대표로 구성된다.

식품안전 국가표준의 제정은 식품안전 위험평가결과에 근거하고 식용 농산물의 품질안전 위험평가결과를 충분히 고려해야 하며 관련 국제표준과 국제식품안전 위험평가결과를 참조하고 식품생산·경영자와 소비자의 의견을 널리 참고해야 한다.

제24조 식품안전 국가표준이 없는 경우 식품안전 지방표준을 제정할 수 있다.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위생행정부문은 식품안전 지방표준을 제정하고 본 법의 식품안전 국가표준 관련 규정을 참조하여 집행해야 하며 공무원 위생행정부문에 보고하여 등록한다.

제25조 기업이 생산한 식품이 식품안전 국가표준 또는 지방표준이 없는 경우 기업표준을 제정하여 생산의 근거로 한다. 국가는 식품생산기업이 식품안전 국가표준 또는 지방표준보다 더 엄격한 기업표준을 제정하도록 독려한다. 기업표준은 성급 위생행정부문에 보고하여 등록해야 하며 해당 기업에 적용한다.

제26조 식품안전표준은 국민이 무료로 열람할 수 있다.

제4장 식품 생산·경영

제27조 식품생산·경영은 식품안전표준과 아래와 같은 조건을 구비해야 한다.

(1) 생산·경영하는 식품품목과 수량에 적절한 식품원료처리 및 식품

가공, 포장, 저장 등의 장소가 마련되어야 하며, 해당 장소의 청결을 유지해야 하며 유독, 유해장소 및 기타 오염원과 규정된 거리를 유지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 (2) 생산·경영하는 식품품목과 수량에 적절한 생산·경영설비 또는 시설이 마련되어야 하며, 상응한 소독, 탈의, 세면, 채광, 조명, 통풍, 부패방지, 방진, 방충, 방서, 세척 및 폐수처리, 쓰레기와 폐기물의 보관설비 또는 시설이 마련되어야 한다.
- (3) 식품안전 전문기술인원, 관리인원과 식품안전을 보장하는 규칙과 제도 마련
- (4) 설비 배치와 생산공정은 합리적이어야 하고, 가공식품과 직접 먹는 식품, 원재료와 완제품의 교차오염을 방지하고, 식품이 유독 물질과 불결한 물질에 접촉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5) 식기 및 직접 먹는 식품을 담는 용기는 사용 전 반드시 세척, 소독해야 하고 취사도구, 용구는 사용 후 반드시 깨끗이 세척하여 청결을 유지해야 한다.
- (6) 식품의 저장, 운송, 하역에 필요한 용기, 도구와 설비는 안전, 무해하여야 하고 청결을 유지하여 식품오염을 방지해야 하며 식품안전 보장에 필요한 온도 등 특수요건에 부합되어야 하며 식품을 유독, 유해물품과 함께 운송해서는 아니 된다.
- (7) 직접 먹는 식품은 소포장 또는 무독하고 청결한 포장재, 식기를 사용해야 한다.
- (8) 식품생산·경영자는 개인위생을 청결하게 유지하고 식품을 생산·경영 시 반드시 손을 깨끗이 씻고 청결한 작업복과 작업모를 착용해야 한다. 포장이 없는 직접 먹는 식품을 판매할 때는 무독하

고 청결한 판매용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9) 용수(用水)는 국가가 규정한 생활음용수 위생표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0) 사용하는 세척제, 소독제는 인체에 안전, 무해한 것이어야 한다.

(11) 법률, 법규에서 규정한 기타 요건

제28조 다음 식품의 생산·경영은 금지한다.

(1) 비 식품원료로 생산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제 이외의 화학물질과 기타 인체건강에 해가 될 수 있는 물질을 첨가한 식품, 또는 회수 식품을 원료로 생산한 식품

(2) 병원성 미생물, 농약잔류물, 수의약 잔류물, 중금속, 오염물질 및 기타 인체건강에 해가 되는 물질함량이 식품안전표준의 한계치를 초과한 식품

(3) 영양성분이 식품안전표준에 부합되지 않는 영·유아와 기타 특정 대상에 공급되는 주·보조식품

(4) 부패되어 변질된 것, 유지(油脂)가 쉰고 부패한 것, 곰팡이·벌레가 생긴 것, 불결한 것, 이물질이 섞여있거나 또는 감각기관에 이상한 느낌을 주는 식품

(5) 병사(病死), 독사(毒死) 혹은 사인이 불명확한 가금, 가축, 짐승, 해양동물 육류 및 그 제품

(6) 동물위생감독기구의 검역을 받지 않았거나 검역부적합의 육류, 또는 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검사에 부적합인 육류제품

(7) 포장재, 용기, 운송도구 등에 의해 오염된 식품

(8)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

(9) 라벨이 없는 포장식품

(10) 질병의 예방 등 특수목적을 위해 국가가 생산·경영 금지를 규정한 식품

(11) 식품안전표준 또는 요건에 적합하지 않은 기타 식품

제29조 국가는 식품생산·경영에 대해 허가제도를 실시한다. 식품생산, 식품유통, 요식 서비스에 종사할 경우 법에 의거하여 식품생산허가, 식품유통허가, 요식 서비스허가를 취득해야 한다.

식품생산허가를 취득한 식품생산자가 그 생산장소에서 자체 생산한 식품을 판매할 경우 식품유통허가를 받지 않을 수 있으며, 요식허가를 취득한 요식제공자가 그 요식장소에서 자체 가공한 식품을 판매할 경우 식품생산 및 유통허가를 받지 않을 수 있다. 농민이 자체 생산한 식용농산물을 판매 시 식품유통허가를 받지 않을 수 있다.

식품을 생산 경영하는 소규모 작업장과 식품노점상이 식품생산·경영 활동에 종사할 경우 본 법에서 규정한 생산·경영규모, 조건에 적절한 식품안전요건에 들어맞아야 하며 생산 경영하는 식품이 위생, 무독, 해가 없음을 보장해야 한다. 관련 부문은 이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하고 구체적인 관리방법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본 법에 근거하여 제정한다.

제30조 현(縣)급이상 지방인민정부는 식품생산가공 소규모 작업장이 생산조건을 개선하도록 장려하고 식품노점상이 집중거래시장, 점포 등 고정장소에서 경영하도록 한다.

제31조 현(縣)급 이상 품질감독, 공상행정관리, 식약품관리부문은 「행정허가법」의 규정에 의거하여 신청인이 제출한 본 법 제27조 제1항~제4항에서 규정한 관련 자료를 심사하고 필요시에는 신청인의 생산·경영 장소에 대해 현장검사를 실시한다. 규정조건에 부합될 경우 허가를

비준하며 규정조건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허가를 비준하지 않으며 그 이유를 서면으로 고지해야 한다.

제32조 식품생산·경영기업은 본 업체의 식품안전관리제도를 수립 및 건전히 해야 하고 직원의 식품안전지식에 대한 훈련을 강화하며 전직 또는 겸직의 식품안전관리원을 배치하여 자체 생산 경영 식품에 대한 검사업무를 잘 해야 하며 법에 의거하여 식품생산 경영활동에 종사해야 한다.

제33조 국가는 식품생산·경영기업이 양호한 생산규범 요건에 부합하도록 격려하고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을 실시하여 식품안전 관리수준을 제고하는데 대해 권장한다.

인증기구는 법에 의거하여 양호생산규범,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인증을 통과한 식품생산·경영기업에 대해 추적조사를 실시하며 인증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기업에 대해서는 법에 의거하여 인증을 철회하고 즉시 관련 품질감독, 공상행정관리, 식약품관리부문에 통보하여 사회에 공표해야 한다. 인증기구가 추적조사 실시 시 비용을 수취하지 않는다.

제34조 식품생산·경영자는 직원의 건강관리제도를 수립 및 실시해야 한다. 이질, 장티푸스, 바이러스 간염 등 소화기 전염병, 활동성 폐결핵, 화농성 또는 출혈성 피부병 등 식품안전에 지장이 되는 질환에 걸린 자는 직접 먹는 식품을 다루는 직종에 근무해서는 아니 된다. 식품생산·경영인원은 해마다 건강검진을 받아야 하며 건강증명 취득 후 근무가 가능하다.

제35조 식용농산물 생산자는 식품안전표준과 국가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농약, 비료, 성장조절제, 수의약, 사료와 사료첨가제 등 농업투입물을

사용해야 한다. 식용농산물의 생산기업과 농민전문협력경제조직은 식용농산물의 생산기록제도를 수립해야 한다.

현(縣)급 이상 농업행정부문은 농업투입물 사용에 대한 관리 및 지도를 강화해야 하고 건전한 농업투입물의 안전사용제도를 수립해야 한다.

제36조 식품생산자가 식품원료, 식품첨가제, 식품관련제품을 구입 시 공급자의 허가증과 제품합격증명서류를 확인해야 하며 합격증명서류를 제공할 수 없는 식품원료에 대해서는 식품안전표준에 의거하여 검사해야 하며 식품안전표준에 부합하지 않는 식품원료, 식품첨가제, 식품관련제품을 구입 또는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식품생산기업은 식품원료, 식품첨가제, 식품관련제품 구입검사 기록제도를 수립해야 하며 식품원료, 식품첨가제, 식품관련제품의 명칭, 규격, 수량, 공급자 이름 및 연락처, 구입일자 등의 내용을 사실대로 기록한다.

식품원료, 식품첨가제, 식품관련제품 구입검사기록은 사실에 부합되어야 하며 보관기한은 2년 이상이어야 한다.

제37조 식품생산기업은 식품출하 검사기록제도를 수립하여 출하식품의 검사 합격증과 안전현황을 검사해야 하며 식품의 명칭, 규격, 수량, 생산일자, 생산일련번호, 검사합격증번호, 구입자 이름 및 연락처, 판매일자 등의 내용을 사실대로 기록해야 한다.

식품출하 검사기록은 사실에 들어맞아야 하며 보관기한은 2년 이상이어야 한다.

제38조 식품, 식품첨가제와 식품관련제품의 생산자는 식품안전표준에 의거하여 자체 생산한 식품, 식품첨가제와 식품관련제품에 대해 검사를 실시해야 하며 검사 합격 후 출하 또는 판매가능하다.

제39조 식품경영자는 식품 구입 시 공급자의 허가증과 식품합격증명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식품경영기업은 식품구입 검사기록제도를 수립해야 하며 식품 명칭, 규격, 수량, 생산일련번호, 유통기한, 공급자 이름 및 연락처, 구입일자 등의 내용을 사실대로 기록해야 한다.

제40조 식품구입 검사기록은 사실에 부합되어야 하며 보관기한은 2년 이상이어야 한다.

총괄배송의 운영방식을 실시하는 식품경영기업은 기업본부에서 공급자의 허가증과 식품합격증명서류를 총괄 검사하며 식품구입검사기록을 실시한다.

식품경영자는 식품안전보증의 요건에 의거하여 식품을 저장해야 하고 재고식품을 정기적으로 검사해야 하며 변질 또는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제때에 처리해야 한다.

제41조 식품경영자가 날개 포장식품 저장 시에는 저장장소에 식품의 명칭, 생산일자, 유통기한, 생산자 명칭 및 연락처 등의 내용을 표기해야 한다.

식품경영자가 날개 포장식품을 판매할 경우 날개 포장식품의 용기, 겉포장에 식품의 명칭, 생산일자, 유통기한, 생산·경영자 명칭 및 연락처 등의 내용을 표기해야 한다.

제42조 사전포장식품(prepackage foods)의 포장에는 라벨이 부착되어야 하며 라벨에는 아래 사항을 표기해야 한다.

- (1) 명칭, 규격, 순수함량, 생산일자
- (2) 성분 또는 원료배합표
- (3) 생산자의 이름, 주소, 연락처

- (4) 유통기한
- (5) 제품표준코드
- (6) 보관 조건
- (7) 사용한 식품첨가제의 국가표준에서의 통용명칭
- (8) 생산허가증번호
- (9) 법률, 법규 또는 식품안전표준에서 규정한 필히 표기해야 할 기타 사항

영·유아와 기타 특정대상에 공급되는 주·보조식품의 라벨에는 주요 영양성분 및 그 함량도 표기해야 한다.

제43조 국가는 식품첨가물의 생산에 대해 허가제도를 실시한다. 식품첨가물 생산허가 신청의 조건, 절차는 국가의 공업제품 생산허가증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제44조 새로운 식품원료를 사용하여 식품생산에 종사하거나 식품첨가제 신 품종, 식품관련제품의 신품종 생산활동에 종사할 것을 신청하는 업체나 개인은 국무원 위생행정부문에 관련 제품의 안전성 평가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국무원 위생행정부문은 신청접수일로부터 60일 내에 관련 제품의 안전성 평가자료에 대해 심사해야 한다. 식품안전 요건에 부합할 경우 법에 의거하여 비준 및 공표하며 식품안전 요건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비준불가를 결정하고 그 이유를 서면으로 설명한다.

제45조 식품첨가제는 기술상 필요하고 위험평가를 통해 안전성과 확실성이 증명되면 허가받은 사용범위에 포함시킬 수 있다. 국무원 위생행정 부문은 기술필요성과 식품안전 위험평가결과에 근거하여 적기에 식품첨가제의 품종, 사용범위, 사용량 표준에 대해 개정해야 한다.

- 제46조 식품생산자는 식품안전표준에 규정된 식품첨가제의 품종, 사용범위, 사용량에 의거하여 식품첨가제를 사용해야 하며 식품생산과정에 식품첨가제외의 화학물질 및 기타 인체건강에 해가 되는 물질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 제47조 식품첨가제는 라벨, 설명서와 포장에 있어야 하며 라벨, 설명서에는 본 법 제42조 (1)~(6), (8)~(9)항에서 규정한 내용 및 식품첨가제의 사용범위, 사용량, 사용방법을 표기해야 하며 라벨에 문자로 “식품첨가제”라 표기해야 한다.
- 제48조 식품과 식품첨가제의 라벨, 설명서에는 허위 또는 과장된 내용이 있어서는 아니 되며 질병예방, 치료기능에 관련된 용어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생산자는 라벨, 설명서에 표기된 내용에 대해 책임을 진다. 식품과 식품첨가제의 라벨, 설명서는 반드시 뚜렷해야 하며 식별이 용이해야 한다.
- 해당 라벨, 설명서에 표기된 내용과 부합하지 않은 식품과 식품첨가제는 출시 및 판매해서는 아니 된다.
- 제49조 식품경영자는 식품라벨에 표시된 경고표시, 경고설명 또는 주의사항의 요건에 의거하여 포장식품을 판매해야 한다.
- 제50조 생산·경영하는 식품에 약품을 첨가해서는 아니 된다. 단, 전통에 의거하여 식품인 동시에 한약재인 물질은 첨가할 수 있다. 전통에 의거하여 식품인 동시에 한약재인 물질의 목록은 국무원 위생행정부문이 제정 및 공포한다.
- 제51조 국가는 특정 보건기능을 주장하는 식품에 대해 엄격한 관리감독을 실시한다. 관련 관리감독부문은 법에 의거하여 직책을 이행하고 책임져야 하며 구체적인 관리방법은 국무원 규정에 따른다.

특정 보건기능을 주장하는 식품은 인체에 급성, 아급성 또는 만성위해를 초래해서는 아니 되고 해당 라벨, 설명서에 질병예방, 치료기능에 관련된 내용을 표기해서는 아니 되며 내용은 반드시 사실에 부합되고 적절한 대상, 부적절한 대상, 효능성분 또는 대표성분 및 그 함량 등을 표기해야 한다. 제품의 기능과 성분은 반드시 라벨, 설명서에 표기된 내용과 일치해야 한다.

제52조 집중 교역시장의 개설기업, 판매대 대여업무 경영기업, 전시회 개최기업은 시장진입 식품경영자의 허가증을 심사해야 하고 시장진입 식품경영자의 식품안전 관리책임을 명확히 해야 하며 시장진입 식품경영자의 경영환경, 조건에 대해 정기적인 검사를 수행해야 한다. 식품경영자가 본 법을 위반한 행위를 발견할 경우 즉시 제지하고 소재지 현(縣)급 공상행정관리 또는 식약품관리부문에 보고해야 한다.

집중 교역시장의 개설기업, 판매대 대여업무 경영기업, 전시회 개최기업이 윗 조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본 시장에 식품안전 사고가 발생할 경우 연대 책임을 져야 한다.

제53조 국가는 식품리콜제도를 수립한다. 식품생산자는 자체 생산한 식품이 식품안전표준에 부합되지 않음을 발견했을 경우 즉시 생산을 멈추고 이미 출시 판매된 식품을 리콜하고 관련 생산·경영자 및 소비자에게 통지해야 하며 리콜 및 통지상황을 기록해야 한다.

식품경영자는 자체 경영하는 식품이 식품안전표준에 부합되지 않음을 발견했을 경우 즉시 경영을 정지해야 하며 관련 생산·경영자 및 소비자에게 통보하고 경영정지 및 통지상황을 기록해야 한다. 식품생산자가 리콜해야 한다고 인정할 경우 즉시 리콜해야 한다.

식품생산자는 리콜한 식품에 대해 보완, 무해화처리, 폐기 등의 조치

를 취해야 하고 식품리콜 및 처리현황을 현(縣)급 이상 품질감독부문에 보고해야 한다.

식품생산·경영자가 본 법의 규정에 의거하여 리콜하지 않았거나 식품안전표준에 부합하지 않는 식품에 대한 경영을 정지하지 않았을 경우 현(縣)급 이상 품질감독, 공상행정관리, 식약품관리부문은 리콜 또는 경영정지를 명령할 수 있다.

제54조 식품광고 내용은 반드시 진실하고 합법적이어야 하며 허위 또는 과장된 내용을 포함해서는 아니 되며 질병예방, 치료기능에 관련된 용어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식품안전관리감독부문 또는 식품검사직책을 맡은 기구, 식품협회, 소비자협회는 광고 또는 기타 형식으로 소비자에게 식품을 추천해서는 아니 된다.

제55조 사회단체 또는 기타 조직, 개인이 허위광고에서 소비자에게 식품을 추천하여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에 손해를 보게 하였을 경우, 식품생산·경영자와 연대책임을 져야 한다.

제56조 지방 각급 인민정부는 식품 규모화생산, 연계경영·배송을 권장한다.

제 5 장 식품검사

제57조 식품검사기구는 국가 관련 인증인가규정에 의거하여 자격인증을 취득 후 식품검사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 단, 법률에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식품검사기구의 자격인증조건과 검사규범은 국무원 위생행정부문이 규정한다.

본 법 실시 전 국무원의 관련주요부문의 비준으로 설립 또는 법에 의거하여 인증된 식품검사기구는 본 법에 의거하여 계속하여 식품검사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

제58조 식품검사는 식품검사기구가 지정한 검사원이 독자적으로 실시한다. 검사원은 관련 법률, 법규, 식품안전표준과 검사규범에 의거하여 식품에 대한 검사업무를 전개해야 하며 과학을 존중하고 직업윤리를 충실히 지키며 발급한 검사데이터, 결론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보장해야 하고 가짜 검사보고서를 발급해서는 아니 된다.

제59조 식품검사는 식품검사기구와 검사원 책임제를 실시한다. 검사보고서에는 식품검사기구의 공인을 날인해야 하고 검사원의 서명 또는 날인이 있어야 한다. 식품검사기구와 검사원은 발급한 검사보고서에 대해 책임진다.

제60조 식품안전관리감독부문은 식품에 대해 검사면제를 실시해서는 아니 된다.

현(縣)급 이상 품질감독, 공상행정관리, 식약품관리부문은 식품에 대해 정기 또는 비정기적인 표본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표본검사 시 추출한 샘플을 구입해야 하며 검사비와 기타 임의 비용을 수취하지 않는다.

현(縣)급 이상 품질감독, 공상행정관리, 식약품관리부문이 법 집행 과정에서 식품검사가 필요한 경우 본 법의 규정에 부합되는 식품검사기구에 의뢰하고 관련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검사결론에 이의가 있을 경우 법에 의거하여 재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1조 식품생산·경영자가 식품검사기구에 자체 생산·경영하는 식품에 대한 검사를 의뢰할 경우 본 법의 규정에 부합되는 식품검사기구에 식품

검사를 의뢰해야 한다.

식품협회 등 조직, 소비자가 식품검사기구에 식품검사를 의뢰할 필요가 있을 경우 본 법의 규정에 부합되는 식품검사기구에 의뢰해야 한다.

제 6 장 식품수출입

제62조 수입 식품, 식품첨가제 및 식품관련제품은 중국의 식품안전 국가표준에 부합되어야 한다.

수입식품은 출입경검험검역기구의 검사에 합격 후 세관이 출입경검험검역기구가 서명 발급한 통관증명에 근거하여 통과시킨다.

제63조 식품안전 국가표준이 없는 식품 또는 처음으로 수입되는 식품첨가제 신제품, 식품관련제품의 신제품에 대해 수입상은 국무원 위생행정부문에 신청을 제출하고 관련 안전평가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국무원 위생행정부문은 본 법의 제44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허가여부를 결정하고 적시에 상응한 식품안전 국가표준을 제정해야 한다.

제64조 외국에서 발생한 식품안전사고가 중국 국내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거나 또는 수입식품에서 심각한 식품안전문제를 발견했을 경우, 국가출입경검험검역부문은 즉시 위험조기경보 또는 통제조치를 취하고 국무원 위생행정, 농업행정, 공상행정관리와 관리부문에 통보해야 한다. 통보를 받은 각 부문은 즉시 관련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65조 중국에 식품을 수출하는 수출상 또는 대리상은 국가출입경검험검역 부문에 등록해야 하며, 중국에 식품을 수출하는 국외 식품생산기업은 국가출입경검험검역부문에 등록해야 한다.

국가출입경검험검역부문은 등록한 수출상, 대리상과 국외 식품생산 기업명단을 정기적으로 공표해야 한다.

제66조 수입포장식품은 중문 라벨, 중문 설명서가 있어야 한다. 라벨 및 설명서는 본 법 및 중국의 기타 관련 법률, 행정법규와 식품안전 국가 표준의 요건에 부합해야 하며 식품 원산지 및 국내 대리상 명칭, 주소, 연락처를 표기해야 한다. 포장식품에 중문 라벨, 중문 설명서가 없거나 또는 라벨 및 설명서가 본 조항의 규정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수입해서는 아니 된다.

제67조 수입상은 식품 수입 및 판매기록제도를 수립하고 식품의 명칭, 규격, 수량, 생산일자, 생산 또는 수입 일련번호, 유통기한, 수출상과 구매상 명칭 및 연락방식, 납품일자 등의 내용을 사실대로 기록해야 한다. 식품의 수입 및 판매기록은 사실에 부합되어야 하고 보관기한은 2년 이상이어야 한다.

제68조 수출식품은 출입경검험검역기구에서 감독, 표본검사를 실시하며 세관은 출입경검험검역기구가 서명 발급한 통관증명에 근거하여 통관을 허용한다.

수출식품생산기업과 수출식품 원료재배, 양식장은 국가출입경검험검역부문에 등록해야 한다.

제69조 국가출입경검험검역부문은 수출입식품의 안전정보를 수집, 총괄하고 제때에 관련 부문, 기구와 기업에 통보해야 한다.

국가출입경검험검역부문은 수출입식품의 수입상, 수출상과 수출식품 생산기업의 신용기록을 수립하여 이를 공표해야 한다. 불량기록의 수입상, 수출상과 수출식품 생산기업에 대해서는 해당 수출입식품에 대한 검험검역을 강화해야 한다.

제7장 식품안전사고조치

제70조 국무원은 국가식품안전사고 응급방지책을 조직 제정한다.

현(縣)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관련 법률 법규와 상급 인민정부의 식품 안전사고 응급 방지책 및 본 지역의 실제 상황에 근거하여 해당 행정 구역의 식품안전사고 응급방지책을 제정하고 한 급 높은 인민정부에 보고하여 등록해야 한다.

식품생산·경영기업은 식품안전사고 처리방안을 제정하고 정기적으로 본 기업의 제반 안전방지조치의 실행상황을 검사하며 제때에 사고 위험요인을 제거해야 한다.

제71조 식품안전사고 발생업체는 즉시 조치하여 사고의 확대를 방지해야 한다. 사고발생업체와 피해자의 치료를 맡은 업체는 즉시 사고발생지의 현(縣)급 위생행정부문에 보고해야 한다.

농업행정, 품질감독, 공상행정관리, 식약품관리부문은 일상적인 관리 감독과정에서 식품안전사고를 발견했거나 또는 식품안전사고 관련 신고를 접수했을 경우 즉시 위생행정부문에 통보해야 한다.

중대한 식품안전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보고를 받은 현(縣)급 위생행정부문은 규정에 의거하여 본급 인민정부와 상급 인민정부 위생행정부문에 보고해야 하며 현(縣)급 인민정부와 상급 인민정부 위생행정부문은 규정에 의거하여 위에 보고해야 한다.

어떠한 업체나 개인이든 식품안전사고에 대해 숨기거나 허위보고, 지연보고를 해서는 아니 되며 관련 증거를 인멸해서는 아니 된다.

제72조 현(縣)급 이상 위생행정부문은 식품안전사고 보고 접수 후 즉시 농업 행정, 품질감독, 공상행정관리, 식약품관리감독과 함께 조사처리하고

아래 조치를 취하여 사회에 대한 위해요소를 방지하거나 줄여야한다.

- (1) 응급구조사업을 전개하고 식품안전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은 인원에 대해 위생행정부문은 즉시 응급치료를 실시해야 한다.
- (2) 식품안전사고 초래가능성이 있는 식품 및 해당 원료를 봉인하여 저장하고 즉시 검사를 실시한다. 오염된 식품 및 해당 원료에 대해서는 식품생산·경영자에게 본 법 제53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리콜, 경영정지 및 폐기할 것을 명한다.
- (3) 오염된 식품용 도구와 설비를 봉인하여 저장하고 소독 세척하도록 명한다.
- (4) 정보 공개사업을 제대로 실시하고 법에 의거하여 식품안전사고 및 해당 처리현황에 대해 발표하며 발생 가능성이 있는 위해요소에 대해 해석 및 설명한다.

중대한 식품안전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현(縣)급 이상 인민정부는 즉시 식품안전사고처리지휘기구를 설립하고 응급방지책을 시행하여야 하며 앞 조항 규정에 의거하여 처리해야 한다.

제73조 중대한 식품안전사고가 발생할 시 시급이상 인민정부 위생행정부문은 즉시 관련 부문과 함께 사고책임조사를 실시하고 관련 부서의 직책 이행을 독촉하며 본급 인민정부에 사고책임조사 처리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중대한 식품안전사고가 2개 이상의 성, 자치구, 직할시에 관련될 경우, 국무원 위생행정부문이 앞 조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사고책임조사를 실시한다.

제74조 식품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현(縣)급 이상 질병예방통제기구는 위생행정부문과 관련 부문을 협조하여 사고현장에 대해 위생처리를 해야

하며 식품안전사고와 관련한 원인에 대해 유행병학조사를 전개한다.

제75조 식품안전사고 조사 시, 사고업체의 책임을 조사하는 것 외에 관리감독과 인증직책을 담당한 관리감독부문, 인증기구 업무인원의 직무상 과실, 독직상황에 대해서도 조사해야 한다.

제8장 관리감독

제76조 현(縣)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본 급 위생행정, 농업행정, 품질감독, 공상행정관리, 식약품관리부문이 해당 행정구역의 식품안전 연도관리감독계획을 제정하도록 조직하며 연도계획에 의거하여 업무를 전개한다.

제77조 현(縣)급 이상 품질감독, 공상행정관리, 식약품관리감독은 각자의 식품안전 관리감독직책을 이행하고 아래 조치를 취할 권리를 가진다.

- (1) 생산·경영장소에 대한 실사를 실시한다.
- (2) 생산·경영되는 식품에 대해 표본검사를 실시한다.
- (3) 관련 계약서, 어음, 장부 및 기타 관련 자료를 검열, 복사한다.
- (4) 식품안전표준에 부합하지 않는 증거가 있는 식품, 불법으로 사용한 식품원료, 식품첨가제, 식품관련제품, 위법생산 경영에 사용 또는 오염된 도구, 설비를 차압, 압류한다.
- (5) 불법종사의 식품생산·경영활동 장소를 차압한다.

현(縣)급 이상 농업행정부문은 「농산물품질안전법」에 규정된 직책에 의거하여 식용농산물을 관리감독한다.

제78조 현(縣)급 이상 품질감독, 공상행정관리, 식약품관리부문은 식품생산·경영자에 대해 감독검사하며 감독검사현황과 처리결과를 기록해야

한다. 감독검사기록은 감독검사원과 식품생산·경영자가 서명 후 분류하여 보존해야 한다.

제79조 현(縣)급 이상 품질감독, 공상행정관리, 식약품관리부문은 식품생산·경영자 식품안전신용기록부를 수립하여 허가발급, 일상 감독검사결과, 불법행위에 대한 조사처리 등 상황을 기록해야 한다. 식품안전신용기록부의 기록에 근거하여 신용불량기록의 생산·경영자에 대한 감독검사 횟수를 늘인다.

제80조 현(縣)급 이상 위생행정, 품질감독, 공상행정관리, 식약품관리부문은 조회, 신고와 고발 접수 후 본 부문 직책범위에 속하는 내용은 수리해야 하고 즉시 답변, 확인, 처리해야 한다. 본 부문 직책범위에 속하지 않는 내용은 처리권이 있는 부문에 서면으로 통지함과 동시에 인계하여 처리하도록 해야 한다. 처리권이 있는 부문은 즉시 처리해야 하고 책임을 전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식품안전사고에 속할 경우 제7장의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처리한다.

제81조 현(縣)급 이상 위생행정, 품질감독, 공상행정관리, 식약품관리부문은 법적 권한과 절차에 의거하여 식품안전 관리감독직책을 이행해야 한다. 생산·경영자의 동일 위법행위에 대하여 2차 이상의 벌금 행정처벌을 부과해서는 아니 된다. 범죄를 구성한 혐의가 있는 경우 법에 의거하여公安기관에 이송해야 한다.

제82조 국가는 식품안전정보 총괄 공표제도를 수립한다. 아래 정보는 국무원 위생행정부문이 총괄 공표한다.

- (1) 국가 식품안전 총 현황
- (2) 식품안전 위험평가정보와 식품안전 위험경고정보
- (3) 중대 식품안전사고 및 해당 처리 정보

(4) 기타 중요한 식품안전정보와 국무원에서 확정한 총괄 공표할 필요가 있는 정보

(2), (3)에 규정된 정보의 영향이 특정지역에 한정될 경우 관련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위생행정부문이 공표할 수도 있다. 현(縣)급 이상 농업행정, 품질감독, 공상행정관리, 식약품관리부문은 각자의 직책에 의거하여 식품안전 일상 관리감독 정보를 공표한다.

식품안전관리감독부문은 정보 공표 시에 정확성, 적시성, 객관성을 보장해야 한다.

제83조 현(縣)급 이상 지방위생행정, 농업행정, 품질감독, 공상행정관리, 식약품관리부문은 본 방법 제82조 (1)에 규정된 총괄 공표할 필요가 있는 정보를 인지한 경우 상급 주관부문에 보고해야 하며 상급 주관부문은 즉시 국무원 위생행정부문에 보고한다. 필요시에는 국무원 위생행정부문에 직접 보고할 수 있다.

현(縣)급 이상 위생행정, 농업행정, 품질감독, 공상행정관리, 식약품관리부문은 보유한 식품안전정보를 서로 통보해야 한다.

제9장 법률책임

제84조 본 법의 규정을 위반하고 허가를 받지 않은 상황에서 식품생산·경영 활동에 종사하거나 허가를 받지 않고 식품첨가제를 생산한 경우, 관련 주관부서에서 각자의 직책에 의거하여 업무를 분담하고 위법소득, 위법생산·경영된 식품, 식품첨가제와 이에 사용된 도구, 설비, 원료 등 물품을 몰수한다. 위법생산·경영된 식품, 식품첨가제의 가치금액이 1만 위안 미만일 경우 2천 위안 이상 5만 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

한다. 제품가치금액이 1만 위안 이상일 경우 가치금액의 5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85조 본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아래의 상황 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 관련 주관부서에서 각자의 직책에 의거하여 업무를 분담하고 위법소득, 위법생산·경영된 식품과 이에 사용된 도구, 설비, 원료 등 물품을 몰수한다. 위법생산·경영된 제품가치금액이 1만 위안 미만일 경우 2천 위안 이상 5만 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품가치금액이 1만 위안 이상일 경우 가치금액의 5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상황이 심각할 경우 허가증을 말소한다.

- (1) 비식품원료를 사용하여 식품을 생산하거나 또는 식품에 식품첨가제 이외의 화학물질 및 기타 인체건강에 해가 될 수 있는 물질을 첨가하거나 또는 회수식품을 원료로 식품을 생산
- (2) 병원성 미생물, 농약잔류물, 수의약 잔류물, 중금속, 오염물질 및 기타 인체건강에 해가 되는 물질함량이 식품안전표준의 한계치를 초과한 식품을 생산 경영
- (3) 영양성분이 식품안전표준에 부합되지 않는 영·유아와 기타 특정 대상에 공급되는 주·보조식품을 생산 경영
- (4) 부패되어 변질된 것, 유지(油脂)가 쉰고 부패한 것, 곰팡이·벌레가 생긴 것, 불결한 것, 이물질 또는 가짜를 섞었거나 또는 감각기관에 이상한 느낌을 주는 식품 경영
- (5) 병사(病死), 독사(毒死) 혹은 사인이 불명확한 가금, 가축, 짐승, 해양동물 육류 경영 또는 그 제품을 생산 경영
- (6) 동물위생감독기구의 검역을 받지 않았거나 또는 검역부적합의 육류 경영 또는 그 제품을 생산 경영

- (7)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 경영
- (8) 국가가 질병 예방 등 특수목적을 위해 생산·경영을 금지한 식품을 생산 경영
- (9) 안정성 평가를 받지 않고 새로운 식품원료를 사용하여 식품생산에 종사하거나 또는 식품첨가제가 신제품, 식품관련제품의 신제품의 생산에 종사
- (10) 관련 주관부문이 식품안전표준에 부합하지 않는 식품에 대해 리콜 또는 경영정지를 명한 후에도 해당 식품생산·경영자가 여전히 리콜 또는 경영정지를 거부할 경우

제86조 본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아래의 상황 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 관련 주관부서에서 각자의 직책에 의거하여 업무를 분담하고 위법소득, 위법생산·경영된 식품과 이에 사용된 도구, 설비, 원료 등 물품을 몰수한다. 위법생산·경영된 제품가치금액이 1만 위안 미만일 경우 2천 위안이상 5만 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품가치금액이 1만 위안 이상일 경우 가치금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상황이 엄중할 경우 생산정지, 영업정지를 명하며 허가증을 말소한다.

- (1) 포장재, 용기, 운반도구 등에 의해 오염된 식품 경영
- (2) 라벨이 없는 포장식품, 식품첨가제 또는 라벨, 설명서가 본 법의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식품, 식품첨가제를 생산 경영
- (3) 식품생산자가 식품안전표준에 부합하지 않는 식품원료, 식품첨가제, 식품관련제품을 구입, 사용
- (4) 식품생산·경영자가 식품에 약품 첨가

제87조 본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아래의 상황 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 관련 주관부서에서 각자의 직책에 의거하여 업무를 분담하고 즉시 시정을

명하고 경고를 준다. 시정을 거부할 경우 2천 위안 이상 2만 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상황이 심각할 경우 생산정지, 영업정지를 명하고 허가증을 말소한다.

- (1) 구입한 식품원료와 생산한 식품, 식품첨가제, 식품관련제품에 대해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 (2) 검사기록제도, 출하검사기록제도를 수립하지 않거나 준수하지 않은 경우
- (3) 식품안전기업표준을 제정하고 본 법의 규정에 의거하여 등록하지 않은 경우
- (4) 규정한 요건에 따르지 않고 식품을 저장, 판매하거나 재고식품을 처리한 경우
- (5) 구입시 허가증과 관련 증명서류를 확인하지 않은 경우
- (6) 생산한 식품, 식품첨가제의 라벨, 포장, 설명서에 질병예방, 치료 기능 관련 용어 사용
- (7) 본 법 제34조에 열거된 질병에 걸린 인원을 직접 먹는 식품과 접촉하는 업무에 배치한 경우

제88조 본 법의 규정을 어기고 사고업체가 식품안전사고 발생 후 처리 및 보고하지 않은 경우 관련 주관부서에서 각자의 직책에 의거하여 업무를 분담하고 시정을 명하고 경고를 준다. 관련 증거를 인멸할 경우 생산정지, 영업정지를 명하고 2천 위안 이상 10만 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경우 원 증서발급부서에서 허가증을 말소한다.

제89조 본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아래의 상황 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

- (1) 중국 식품안전 국가표준에 부합하지 않는 식품 수입

(2) 식품안전 국가표준이 없는 식품을 수입하거나 또는 식품첨가제
신품종, 식품관련제품의 신품종을 처음 수입 시 안전성 평가를
받지 않은 경우

(3) 수출상이 본 법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식품을 수출한 경우
본 법의 규정을 위반하고 수입상이 식품수입 및 판매기록제도를 수립
및 준수하지 않은 경우, 본 법 제87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처벌한다.

제90조 집중 교역시장의 개설기업, 판매대 대여업무 경영기업, 전시회 개최
기업이 본 법의 규정을 위반하고 허가를 받지 못한 경영자가 시장에
진입하여 식품을 판매하도록 허가했거나 또는 검사, 보고 등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관련 주관부문에서 각자의 직책에 의거하여 업
무를 분담하고 2천 위안 이상 5만 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심각
한 결과 초래 시 영업정지를 명하고 원 증서발급부서에서 허가증을
말소한다.

제91조 본 법의 규정을 위반하고 요구에 따르지 않고 식품을 운송할 경우,
관련 주관부문에서 각자의 직책에 의거하여 업무를 분담하고 즉시
시정을 명하고 경고를 주며, 시정을 거부할 경우 영업정지 시정을 명
하고 2천 위안 이상 5만 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상황이 심각할
경우 원 증서발급부서에서 법에 의거하여 허가증을 말소한다.

제92조 식품생산, 식품 유통 및 요식서비스 허가증을 취소당한 업체는 처벌
결정이 내려진 날부터 앞으로 5년간 식품생산·경영관리업종에 종사
해서는 아니 된다.

식품 생산·경영자가 식품 생산·경영활동에 종사해서는 안 되는 사람
을 직원으로 채용했을 경우 해당 허가 증명서 발급기관에서 해당 업
체의 허가 증명을 취소한다.

제93조 식품검사기구, 식품검사원이 본 법의 규정을 어기고 허위 검사보고서를 작성 발행한 경우 해당 자격을 부여받은 주관부문 또는 기구에서 동 검사기구의 검사자격을 취소한다. 법에 의거하여 검사기구의 직접 책임을 진 주관인원과 식품검사원에 대해 면직 또는 해고 처분을 내린다.

본 법의 규정을 어기고 형사책임이나 해고처분을 받은 식품검사기구 인원은 형벌집행기간 완료 또는 처분결정일로부터 10년간 식품검사업무에 종사해서는 아니 된다. 식품검사기구에서 식품검사업무에 종사할 수 없는 인원을 고용할 경우, 해당 자격을 부여받은 주관부서 또는 기구에서 동 검사기구의 검사자격을 취소한다.

제94조 본 법의 규정을 위반하고 광고에서 식품품질에 대해 허위 홍보하여 소비자를 속일 경우 「광고법」에 의거하여 처벌한다.

식품안전관리감독부문 또는 식품검사직책을 담당한 기구, 식품협회, 소비자협회가 본 법의 규정을 어기고 광고 또는 기타 형식으로 소비자에게 식품을 추천할 경우, 주관부문에서 위법소득을 몰수하고 법에 의거하여 직접 책임을 진 주관인원과 기타 직접 책임인원에 대해 중과실로 기록에 남기거나 유급 또는 면직처분을 내린다.

제95조 본 법의 규정을 어기고 현(縣)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가 식품안전 관리감독과정에서 직책을 이행하지 않아 해당 행정구역내에서 중대한 식품안전사고가 발생되고 심각한 사회영향을 초래하였을 경우, 법에 의거하여 주요 담당책임자와 기타 직접 책임이 있는 주요인원과 기타 직접 책임이 있는 인원에 대해 중과실로 기록에 남기거나 유급, 면직 또는 해고처분을 내린다.

본 법의 규정을 어기고 현(縣)급 이상 위생행정, 농업행정, 품질감독,

공상행정관리, 식약품관리부문 또는 기타 행정부문이 본 법에서 규정한 직책을 이행하지 않거나 직권 남용, 직무를 소홀히 하고,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하여 부정을 초래할 경우 법에 의거하여 직접 책임을 진 주관인원과 기타 직접 책임인원에 대해 중과실로 기록에 남기거나 유급처분을 내린다.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경우 면직 또는 해고처분을 내리며 해당 주요책임자는 인책 사직하도록 한다.

제96조 법의 규정을 위반하고 신체, 재산 또는 기타 손해를 초래할 경우 법에 의거하여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식품안전표준에 부합하지 않는 식품을 생산하거나 또는 식품안전표준에 부합하지 않는 식품임을 알면서 판매할 경우, 소비자는 손해배상 요구 외에 생산자 또는 판매자에게 제품가격의 10배에 해당하는 배상금을 요구할 수도 있다.

제97조 본 법의 규정을 어길 경우 민사배상책임과 과료, 벌금 부과책임을 져야 하며 그 재산이 동시 지불하기에 부족할 경우 우선 민사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제98조 본 법의 규정을 어기고 범죄를 구성할 경우 법에 의거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10장 부 칙

제99조 본 법에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식품: 사람에게 제공되는 식용 또는 음용의 완제품과 원료 및 전통에 의거하여 식품이면서 약품인 물품, 단 치료를 목적으로 한 물품은 불포함.

- 식품안전: 식품이 무독, 무해하고 정해진 영양요건에 부합되어야 하며 인체건강에 어떠한 급성, 아급성 또는 만성위해를 초래하지 않음을 말한다.
- 사전포장식품(prepackage foods): 미리 정량으로 포장되었거나 포장재와 용기 내에 제조된 식품을 말한다.
- 식품첨가제: 식품의 품질과 색, 향, 맛을 개선하고 부패방지와 신선도 보장 및 가공공법의 수요로 식품에 첨가한 인공합성 또는 천연 물질을 말한다.
- 식품포장재와 용기: 식품 또는 식품첨가제를 담거나 포장하는 종이, 대, 나무, 금속, 범랑, 도자기, 플라스틱, 고무, 천연섬유, 화학섬유, 유리 등 제품과 식품 또는 식품첨가제에 직접 접촉되는 도료를 말한다.
- 식품용 도구, 설비: 식품 또는 식품첨가제의 생산, 유통, 사용 과정에서 식품 또는 식품첨가제와 직접 접촉하는 기계, 파이프, 컨베이어 벨트, 용기, 도구, 식기 등을 말한다.
- 식품용 세척제, 소독제: 식품, 식기 및 직접 식품과 접촉하는 도구, 설비 또는 식품포장재와 용기를 직접 세척하거나 소독하는데 사용되는 물질을 말한다.
- 유통기한: 포장식품의 라벨에 표시한 저장조건하에 품질을 보존하는 기한을 말한다.
- 식이성 질병: 식품 중 발병 요인이 인체에 들어와 초래하는 감염성, 중독성 등 질병을 말한다.
- 식중독: 유독 유해물질에 오염된 식품 또는 유독 유해물질을 함유한 식품을 섭취 후 나타난 급성, 아급성 질병을 말한다.

- 식품안전사고: 식중독, 식이성 질병, 식품오염 등 식품에서 오는 인체건강에 해가 되거나 해가 될 가능성이 있는 사고를 말한다.

제100조 식품생산·경영자가 본 법 시행 전에 이미 관련 허가증을 취득했을 경우 해당 허가증은 유효하다.

제101조 우유제품, 유전자 변형 식품(GMO), 돼지도축, 주류와 식염의 식품 안전관리는 본 법을 적용하며 법률, 행정법규에 별도 규정이 있을 경우 그 규정에 따른다.

제102조 철도 운영 중의 식품안전 관리방법은 국무원 위생행정부문이 국무원 관계부문과 함께 본 법에 의거하여 제정한다.
군용식품과 자급식품의 식품안전관리방법은 중앙군사위원회에서 본 법에 의거하여 제정한다.

제103조 국무원은 실제수요에 근거하여 식품안전 관리감독체제에 대해 조정할 수 있다.

제104조 본 법은 2009년 6월 1일부터 시행하며 이와 동시에 「식품위생법」은 폐지된다.

〈부록 3〉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발행 중국농업 관련 연구보고서 및 자료 목록

- 권오복·정정길. 2004. 「중국의 경제성장과 한국 농업·농촌의 새로운 기회-대중국 농산물 수출확대 방안」 R476.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김경필. 2010. 「중국 감 산업 동향」 해외농업 시리즈 7.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김병률·홍승지·한석호·김성우. 2004. 「중국 산둥성의 채소류 생산, 유통, 수출 현황과 전망」 R484.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김연중·송성환·박영구·진경무. 2006. 「중국 김치·당근의 생산·유통·수출 현황과 전망」 연구자료 D213.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문한필·최세균·정대희. 2011. 「한·중 농산물 경쟁력 및 교역장벽 분석」 R649-1.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서종혁·박현태·김태곤. 2002. 「중국의 사회·경제구조와 농업정책」 D168-1.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서종혁·박현태·김태곤. 2002. 「중국의 농산물 수급과 생산구조」 D168-2.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서종혁·박현태·김태곤. 2002. 「중국 농업의 국제화와 발전과제」 D168-3.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안중운·구기보. 2004. 「중국의 WTO 가입과 한·중 농업협력」 연구자료 D186.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어명근·정정길·김배성·이현주·박근필. 2005. 「중국의 농산물 수급 중장기 전망(1/2차년도)」 R510.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어명근·정정길·김배성·이현주·리경호. 2006. 「중국의 농산물 수급 중장기 전망(2/2차년도)」 R535.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어명근·김연중·김윤식·전형진·리경호. 2007. 「중국 원예산업의 발전과 대응방안」 R555.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어명근·전형진·리경호. 2008. 「한·중 FTA 농업부문의 예상 쟁점과 대책」 경제·인문사

- 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08-03-03.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어명근·전형진·김윤식·리경호. 2008. 「한·중 FTA 협상에 대비한 농산물 양허전략 연구」 C2008-7.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어명근·이대섭·윤형현. 2009. 「한·중 FTA 협상대비 품목군별 대응방안」 C2009-3.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어명근·최세균·전형진·정대희. 2010. 「FTA 대상국의 농산물 협상 사례분석: 중국의 FTA 사례분석」 R626-1.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우약봉(牛若峰) 등 지음·지성태 번역. 2006. 「중국의 “三農” 문제 회고와 전망」 D208.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이계임·이용선·전형진·주현정. 2008. 「한·중·일 청소년의 식품소비 비교분석」 P104.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전창곤·조명기·정정길. 2002. 「중국의 농산물유통체계에 관한 연구」 R439.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전형진 외. 2008~2011. 「중국농업동향」 E09-2008-01~E09-2011-04, 제1권 제1호 ~ 제4권 제4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전형진·리경호. 2007. 「중국농업동향」 M88.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전형진·어명근·리경호. 2008. 「중국의 주요 농산물 주산지 변동에 관한 연구」 R583.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전형진 외. 2009. 「중국 동북3성의 중·단립종 쌀산업 구조변화와 생산계열화 실태 조사 연구」 P124.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전형진·어명근·홍현표·장홍석·김보경·김진경. 2010. 「중국 농수산물 수출입 관련 제도 분석 및 우리의 수출확대 방안」 C2010-34.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전형진·권태진·남민지. 2010. 「중국의 친환경농식품 시장 현황과 전망」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대중국 종합연구 협동연구 총서 10-03-07.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전형진. 2011. “중국의 농산물 수출입제도와 우리의 수출확대 방안” 「농업전망2011(I): 농업·농촌과 농식품산업: 새로운 시장과 기회」 E04-2011.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전형진·김영훈·남민지·권나경. 2011. 「중국 농업의 지역별·품목별 성장특성 및 시사점」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대중국 종합연구 협동연구 총서 10-03-47.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전형진·최세균·어명근·한석호·문한필·정대희·남민지·승준호. 2011. 「한·중 FTA 대비 양국간 농산물 교역구조 변화 전망」 R649.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전형진·어명근·남민지. 2011. 「중국 농업의 구조변화와 한·중 농산물 교역 전망」 R649-2.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정정길·김정호·강정일. 2000. 「중국 농업과 농정의 전개과정」 D144.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정정길·이현주. 2003. 「중국농업연구 초록」 D181.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정정길·성명환. 2003. 「중국의 쌀 수급 현황과 전망」 R468.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정정길·이성귀. 2004. 「중국의 중단립종 쌀 생산 수출 잠재력」 P78.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최세균·어명근·전형진·정대희·최원목·정인교. 2010. 「FTA 대상국의 농산물 협상 사례분석」 R626.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최지현·박근필·송성환. 2005. 「중국산 수입 농식품의 안전성 확보 방안」 P81.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한석호·전형진·승준호. 2011. 「한·중 농업정책시물레이션모형 구축 연구」 R649-3.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황윤재·전형진·한재환. 2010. 「한·중·일 농식품 안전관리 체계 비교와 상호협력 방안」 R625.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해외농업시리즈 9: 중국농업 ③

중국의 식품안전 관리체계

등 록 제6-0007호(1979. 5. 25)

인 쇄 2012. 6.

발 행 2012. 6.

발행인 이동필

발행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30-71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로 117-3

전화 02-3299-4000 <http://www.krei.re.kr>

인쇄처 (주)문원사

전화 02-739-3911~5 E-mail: munwonsa@chol.com

ISBN 978-89-6013-336-5 93520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시하면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무단 전재하거나 복사하면 법에 저촉됩니다.